

최 춘 흠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 춘 흙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인 쇄 2007년 12월 24일
발 행 2007년 12월 28일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동북아연구실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02) 900-4300
(직통) 02) 901-2527
(팩시밀리) 02)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도서출판 늘품 (02 2275-5326)

인 쇄 처 양 동 (02 2272-1767)

가 격 ₩5,000

© 통일연구원, 2007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 서울 : 통
일연구원, 2007
p. ; cm. -- (연구총서 ; 07-14)

참고문헌수록
ISBN 978-89-8479-425-2 93340 : ₩5,000

349.12011-KDC4
327.5105193-DDC21

CIP2007004060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서 언	1
II. 중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	5
1. 동북아 안보 정세 인식	7
2. 동북아 안보 전략 기조	14
III. 중국의 대북 정책: 전개 및 현황	29
1. 전개	31
2. 현황	34
IV. 6자회담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51
1. 한반도비핵화	53
2.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	65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68
4. 북·미, 북·일 수교	78
5.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	81

V. 결어: 전망	85
1. 중국의 대북 정책	87
2.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93
참고문헌	97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2

표목차

<표 III-1> 북한과 중국의 교역상황(1997~2005년)	40
<표 III-2> 중국의 대북 교역액	45

I

서 언



북한의 핵개발 의욕과 핵무기 보유는 중·북 관계를 기본적으로 변형시키는 사안이다. 중국은 북핵 실험이전까지 남북한이 선언한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여 왔으며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가 평화적으로 협상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부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개한 기존의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북핵 실험 직후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경제 및 외교적 제재 결의에 찬성하여 대북 강경노선을 취하면서도 6자회담 틀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6자회담 지속 주장과 중국의 북·미간 중재외교에 힘입어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과 2007년 6자회담 2·13합의가 도출되었다. 2·13합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핵문제를 포괄적 사안으로 접근하여 북한의 핵폐기 단계에 따른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에 동의하였다. 또한 참가국들은 한반도비핵화,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수교와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실현 등을 위한 논의와 협상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데도 동의하였다. 2·13합의가 순조롭게 진전될 경우, 북핵문제는 단지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포기케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13합의에서 다루게 될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심층 분석 전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정세도 크게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핵실험 이후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정책

과 2·13 합의에서 나타난 중국의 입장을 분석 전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중국의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한 인식과 동북아 안보 전략 기조를 서술하고, 둘째, 북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개 및 현황으로 구분 분석하고, 셋째, 6자회담 2·13합의에서 논의되는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문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에 따른 여러 사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국의 대북 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



1. 동북아 안보 정세 인식

중국은 전반적으로 동북아 정세가 미·일동맹 강화, 한반도 불안 대두, 한·미동맹 갈등, 역사 및 영토 문제로 인한 민족주의 대두 등으로 불안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가. 미·일동맹 강화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2기(1998. 3~2003. 2)부터 현재까지 미·일동맹 강화가 자국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정을 저해한다고 평가하여 왔다.¹ 중국은 미국이 9·11 테러사건 이후 일본과 공동으로 반테러 군사전략을 전개하고 있으며, 미국의 21세기 新군사전략 중의 하나인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 차원에서 해외 주둔 미군과 주일미군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한반도와 대만의 유사시 일본의 군사적 개입 확대를 촉구하는 등 미·일 군사동맹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다고 중국은 우려하였다. 중국은 특히 북핵 개발 의혹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미·일 양국이 역내 분쟁에 개입할 능력과 가능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다음과 같은 사례가 미·일 양국이 군사동맹을 확대하는 예로 지적하고 있다. 첫째, 2007월 1월 일본이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 공식 출범시키고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 일본 군대를 파병하는 등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 개시되었으며, 둘째, 미·일 양국이 2007년 10월 13일 일본 근해에서 다국적군을 투입,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기초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이어 11월에

¹ 장쩌민 시대의 국제정세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최춘흠,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양국간 대규모 합동 군사훈련 실시로² 일본의 방위력이 크게 강화되고 있으며, 셋째, 미국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는 점이다. 부시 미대통령은 2007년 9월 일본이 상임이사국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며, 10월에는 존 네그로폰테 미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의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려하는 것은 기존의 중국이 향유하여 온 위상을 크게 훼손하는 처사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행동에 대해 일부 중국 언론은 미국이 자국의 도움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일본과 함께 중국을 군사적으로 포위하려하고 있어 중·미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³

중국이 더욱 우려하고 있는 점은 일본이 중국과 북한을 자국의 잠재위협(potential source of threat)으로 간주하여⁴ 군사력 확대를 도모하고, 미국과는 군사일체화를 통해 미·일 양국이 대만 및 한반도 사태에 공동으로 효과적으로 군사 개입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따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참가, 첩보위성, 이지스함 외에도 헬리콥터 탑재 호위함(DDH), 공중급유기, 초계기의 후계기 등을 통해 군

² 『星條紙』, 2007年 10月 27日.

³ Ching-wei Chang, "U.S. Should Rid Itself of Arrogant Thinking toward China," *Ta Kung Pao(TKP)*, Internet Version October 23, 2007.

⁴ Hun-Jun Park, "Paradigms and Fallacies: Rethinking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p. 185. 일본은 2004년 12월 개정된 [中期防衛力整備計劃]에서 중국과 북한을 잠재 위협요소로 지적하였다.

사력 참여화에 매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⁵

나. 한반도 불안정 대두

중국은 한반도 불안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 의욕과 미국의 과잉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초보적인 수준에 있으며, 핵무기 급의 탄두 수는 약 8~10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이 몇 차례의 핵실험을 하여야만 핵무기 제조기술이 완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핵탄두 운반용 장거리 미사일 능력도 결여되어 있어 기술 향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⁶

중국은 6자회담이 진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한반도의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만일 미국이나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파기하면서 시간을 벌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미국주도의 한반도 무력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⁷

북·미 관계가 불안정을 지속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남북 관계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대북 평화변영 정책으로 대북 경제지원을 확대하여 남북한 관계가 긴장보다는 완화 추

5. 『한국일보』, 2007년 5월 18일.

6. 김홍규, 통일연구원 간담회, 2007년 10월 27일.

7. 중국의 한 학자는 한·미 대북 군사훈련이 북한을 격퇴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 군사적 대치 상태가 언제든지 군사 개입 즉 전쟁으로 돌입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한반도에서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岳喜田, “關於美國在朝鮮半島戰略的思考,” 岳喜田·張長力 主編, 『朝鮮半島問題研究論叢 二』(延邊大學 東北亞國際政治研究所, 2006), pp. 1~21.

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한국의 권고인 핵개발 포기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한반도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보수층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관계 발전보다는 한·미동맹 공고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태세로 인해 한반도 안정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남북간 정치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⁸

아울러 중국은 중·미 관계 진전과 한·중 관계 발전으로 인해 자국의 대북 영향력 역시 감소되고 있으며,⁹ 이로 인해 북한과의 협력이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북한이 자국과 협의 없이 행동할 수 있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자국과 상의 없는 독자적인 행동으로 이로 인해 한반도 안정을 추구하는 중국의 기본 입장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중·북 양국 간에

⁸- Special Article by Lin Chuan, "DPRK, ROK Want To End Military Hostility, Move Toward Reunification: Many Variables Remain," *Zhongguo Tongxun She*, October 6, 2007; Xu Baokang, "Work Together for A Beautiful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Renmin Ribao*, Internet Version October 5, 2007; "News Analysis: Inter-Korean Summit To Broaden Cooperation, Promote Peace," *Xinhua*, October 4, 2007.

⁹- Yufan Hao,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View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p. 37 and p. 47. 북한이 어느 면에서는 중국의 정책을 좋아하지 않지만 높은 수준으로 북한이 경제, 군사적으로 자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미국의 압력을 억제하는 주요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북한이 좌절과 적개심을 품고 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불신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북한의 독자적인 행동은 한반도 안정을 더욱 훼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반도 불안은 북한의 대내 사정 즉, 경제난에서도 기인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기대만큼 나아지고 있지 않아 북한의 대내 불안정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요약하면 중국은 남북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도 북핵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북·미간 불신이 깊어졌으며 중·북간에도 불신이 심화되어 북한의 독자적 행동 표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속되는 북한의 경제난도 한반도 불안을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 한·미동맹 갈등

중국은 북한문제, 특히 북핵문제 해결 방향과 정책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갈등이 증폭되어 한·미관계가 냉전시대의 한·미 관계에서 많이 변질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이 북핵문제를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조치도 감행할 수 있다는 입장 때문에 양국 간에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라. 한국의 대중, 대일 역사, 영토 분쟁 지속

중국은 한국의 대중, 대일 역사 및 영토 분쟁으로 한국의 민족주의가 증폭되어 한·중, 한·일 정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동북공정에서 표출된 고구려사 재정립 작업에 한국이

I

II

III

IV

V

고구려사 왜곡이라는 입장을 표출하면서 한·중 역사분쟁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중국은 자칭링 정협 주석을 한국에 파견하여 한·중 역사분쟁은 학술적 차원에서 해결해나가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구두약속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국인이 자국의 고구려사 재정립 작업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어 한·중 외교적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2007년 4월 방한이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중간에는 영토분쟁이 없기 때문에, 종족의 역사 혹은 영토변경 혹은 운동에 관한 연구는 학문과 정치의 분리와 역사와 현실의 분리라는 원칙하에 정확히 접근하여야 하며, 적절히 조치하여야 하며, 양국관계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¹⁰ 원자바오 총리는 방한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하여 한·중 관계 발전 5개 항을 제시하였다. 5개 항에서 양국은 고위급 인사의 교류를 유지하고, 양국 정부의 부처, 입법부, ‘당 대 당’의 정보교환과 협력을 제고하고, 안보관련 대화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수행한다는 입장이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점은 5개항 협력 조항 어디에도 없어 중국이 한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둘러싼 불만을 시정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보이지 않은 점이다.¹¹ 이를 증명하듯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이 지속되고 있어 한·중 정치관계가 소원해 질 가능성마저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영토 및 역사 분쟁과 관련, 중국은 일본이 독도문제,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으로 인해 한·일

¹⁰- “News Analysis: Inter-Korean Summit To Broaden Cooperation, Promote Peace,” *Xinhua*, April 6, 2007.

¹¹- “News Analysis: Inter-Korean Summit To Broaden Cooperation, Promote Peace,” *Xinhua*, April 10, 2007.



외교 갈등이 증대되어 한·일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간주할 수 없으니 공동 관할하자고 주장함에 따라 한·일간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총리가 신사참배를 지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한국에 끼친 전쟁 피해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행위라고 한국이 계속 비난함으로써 한·일 외교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¹²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왔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2007년 4월 11일 일본 방문에서 중·일 관계 발전을 표방하면서 과거 일본이 중국에 끼친 것은 일부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소행이며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피해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라고 언급하여 일본 정부를 직접 비난하지 않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원 총리는 일본의 경제지원이 중국의 개혁과 개방에 공헌하였으며 이점을 중국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일본인들의 호감을 사는 등¹³ 중·일 관계 개선 모색을 서두르고 있다.

¹² 중국은 중·일 관계 호전되는 상황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한 점을 주시하면서 아베 총리의 2006년 10월 방중이 향후 중·일 관계발전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후진타오 주석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이 그 예이다. 몇 년 동안 일본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중·일 양국관계가 지속적으로 소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Taipei Times*, Internet Version April 19, 2007.

¹³ *Xinhua*, April 11, 2007; 『人民日報』, 2007年 4月 13日; “Editorial: China-Japan Relationship,” *The Korea Times*, April 15, 2007; Jeong-Pyo Hong, “The Dragon Rises: Is China Going to Be a New Hegemon in East Asi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8, No. 2 (Seoul: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7), pp. 436~437.

2. 동북아 안보 전략 기초

중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정세 특히 동북아 및 한반도가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 그간 장쩌민 중국 정부는 ‘평화와 발전(Peace and Development)’ 노선이 외교정책의 기본 노선임을 천명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도광양희 전략으로 군사력을 증진시킨다는 입장을 표방하여 왔다.

이에 대해 2003년 초에 출범한 후진타오 정부는 21세기는 평화와 발전이 대세이나 이에 맞춰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위상을 더욱 높인다는 중국의 민족주의와 대국주의 사상을 기축으로 한 ‘화평굴기(Peaceful Rising)’ 노선을 천명하고 있다.¹⁴ 후진타오 정부가 장쩌민 정부의 대외 정책 기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화평굴기 노선을 천명한 것은 무엇보다 거세지고 있는 소위 미국의 ‘중국위협론’을 불식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이다.¹⁵ 중국은 화평굴기 노선을 추진하는 것은 향후 자국이 역내의 위협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발전의 주축세력이 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자 함에 있으며 미국이 주장하는 ‘중국위협론’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하고 있다. 아울러 후진타오 정부는 외교노선으로 和諧

14- Abanti Bhattacharya,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Chinese Nationalism and China’s Assertive foreign Policy,”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1, No. 1 (Spring/Summer, 2007), pp. 235~262.

15- 중국이 개혁 개방을 추진하여 경제력이 신장되는 가운데 미국은 소위 중국의 부상에 대해 복잡한 인식구조와 여러 가지 다른 판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 복잡한 인식구조와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어 중·미 관계에 대한 양국의 인식은 애증이 서로 교차하는 ‘mirror image’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葉自成 著, 『中國大戰略』(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11), pp. 182~232.



世界(조화로운 세계)창출을 표방하면서 향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발달한 국가들과의 전략대화를 강화하고, 주변국가와의 우호를 추구하면서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도 천명하였다.¹⁶ 상기 중국의 외교 노선은 2007년 10월 17대 당 대회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조화로운 세계 건설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다. 중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조화로운 세계란 지속가능한 평화와 공동 번영을 모색하는 세계라고 지적되었다.¹⁷ 중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화평굴기 노선에서 나타난 외교안보 전략기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대미 견제 및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장쩌민 정부는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력관계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미 경험을 확대하고 미국의 대중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도광양회 전략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장쩌민 정부는 대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에 주력하여 중·미 관계가 크게 증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후진타오 정부는 대미 견제 정책을 많이 가미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반테러 전략을 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중국의 지원을 촉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에 대해 군사적 포위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즉 중국은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역내 군사적 개입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자국에 대해서는 군사적 봉쇄와 경제적 개입(military containment and economic engagement policy)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⁸

¹⁶ 김홍규, 통일연구원 간담회, 2007년 10월 27일.

¹⁷ “China Committed To Peaceful Development, Harmonious World: Official,” *Xinhua*, November 8, 2007. 唐家璇 국무위원이 발언한 내용임.

중국은 미국의 대중 군사적 봉쇄를 견제하고 미국의 대중 개입을 양자간 전략 대화 확대를 통해 축소시켜 나간다는 입장을 정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미국의 요구인 중국의 군사적 불투명성을 해소한다는 입장에서 미국과 고위급 군 인사 교류와 군사협의를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왔다. 중국은 향후 중·미 군사협력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소원해지는지는 완전히 미국의 입장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국의 촉구에 화답하듯, 미국은 2005년 8월 초 로버트 졸릭 미국무부 부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중국과 고위급 전략 대화를 개시하였다.¹⁹ 미국이 중국과 전략 대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북핵문제와 이란문제 해결에 중국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화에서 양국은 소위 고위급 회담을 열고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주로 군사, 에너지, 반테러, 대만문제 등 양국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²⁰

군사문제에 대한 양국간 전략적 협의는 럽스펠드(Donald Henry

¹⁸ 탈냉전이후 미국이 중국에 취하고 있는 전략을 “hedging engagement” 혹은 “strategic hedging”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기본적으로 협력과 경쟁이라는 기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개입과 봉쇄 전략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이 미국에 취하고 있는 전략을 “hedged acquiescence”로 규정하여 경쟁하나 중국의 기본적인 이익이 훼손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주장을 묵인 혹은 수용하는 전략을 구사하여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Minxin Pei, “China’s Hedged Acquiescence: Coping with U.S. Hegemony,” Byung-Kook Kim and Anthony Jones, eds.,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7), pp. 100~101.

¹⁹ 중·미 고위급 전략대화는 2004년 11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던 APEC 정상회의시 중·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여 2005년 8월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되었으며 제2차 회의는 12월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71.

²⁰ 이태환, “미·중 고위급 회담과 후진타오 방미의 의의,” 『정세와 정책』, 9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5), pp. 5~8. 이 논문에서 미·중 관계를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로 특징짓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Rumsfeld) 미국방장관의 방중에서 구체화되었다. 부시 미행정부 국방장관으로서의 처음으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2005년 9월 방중하여 양국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중국은 처음으로 미 국방장관에게 북경 근교에 있는 유도미사일부대가 있는 제2포병사령부(the Second Artillery Corps Headquarters)를 참관케 하는 등 미국에 대해 자국의 군사태세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대해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양국 국방장관 핫라인 전화 개설과 중국의 국방비 공개를 촉구하였다. 중국은 양국 국방장관 핫라인 전화 개설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미사일 숫자와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이미 중·미 정상과 외무장관 간에 핫라인이 있는 이상 국방장관 핫라인 개설에 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여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미국과의 국방장관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판단하고 대미 전략적 협력을 더욱 확대한다는 입장에서 2006년에 ‘화자위선(和字爲先)’ 외교노선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중국은 갈등 조장보다는 화합을 더욱 우선시 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방하여 대미관계를 화(和)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임을 표방한 것이다. 중국이 대미 정책 골격을 ‘화자위선’으로 삼은 데는 미국을 군사력으로 상대하는 데는 장기간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²¹ 중국의 ‘화자위선’ 노선은 미

²¹ 김기훈 뉴욕 특파원, “[특파원 칼럼] 후진타오의 신중과 위엄,” 『조선일보』, 2007년 6월 22일. 후진타오 주석은 2006년 4월 방미 때 중·미 관계에 대한 견해를 “바람을 타고 물결을 깨뜨리며 나갈 때가 오면, 높은 돛 바로 달고 창해를 건너가겠다”(長風破浪會有時, 直掛雲帆濟滄海·이백의 ‘행로난’)고 표현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이다. 중국은 1조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의 투자를 다변화하기 위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 중국은 2007년 4월 7년 만에 최대 규모인 58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순매도했다. 뉴욕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금리)은 5%를 훌쩍 넘어서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에 달하였다. 로버트 키트 미국 재무차관이 급히 방중하여 미국 국채를 팔지 말기를 촉구하였다.

국과의 문제해결에 있어 그동안 미국의 세력에 맞서지 않고 기회를 보면서 자신의 국력을 키워나간다는 도광양회 노선이 소극적인 대미 접근이라면 적극적인 대미 접근을 의미한다.

중국의 대미 화자위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미 전략적 협력에 한계를 보인 시기는 2006년 4월 중·미 정상회담에서이다. 4월 중·미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국제체제의 주요 이해 관계자(stakeholder)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안보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²² 이어 2007년 6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6차 아시아 안보 정상회담(Asia Security Summit) 혹은 아시아 안보대화(통칭 상그리라 대화)시 미 국방장관 - 중국군 총참모부 부총장 회담에서 나타났다. 이들의 발언에서 보면 중국은 중·미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방장관은 중·미 관계에 낙관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국방예산 지출과 국방 현대화에 대한 능력과 의도에 대해 양국 간에 이견이 있다고 언급함으로써²³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 관계로 진전되기 어려운 점이 표출되었다. 그러다가 중국은 2007년 11월 초 중·미 북경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과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제안한 중·미 국방장관 핫라인 전화 개설에 합의하여 대미 군사 협력관계를 진전시키려 하였다.²⁴ 중국은 이전의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미국의 불만을 잠재우려 하였다.

중국은 외환보유고 등으로 4,140억 달러의 미국 국채를 매입,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보유국이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이제는 '미국의 은행' 역할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²² 김재철, “후진타오의 방미와 미·중 관계,” 『정세와 정책』, 5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6), pp. 13~16. 미·중 정상회담은 2006년 4월 18일부터 21일까지이다.

²³ *Xinhua*, June 3, 2007.

²⁴ “U.S. China Recognize Need For Continuing Military Cooperation,” *Itar-Tass*, November 6, 2007 (News Edge, Document Number: 200711061477.1_e79a002cf5531d23).

요약하면, 중국은 내심으로 미국이 자국에게 주요 이해 관계자라고 지칭하여 자국이 미국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확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미국이 중국의 주요 이해를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미국의 언급은 하나의 ‘lip service’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 절하한 것이다.²⁵ 중국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대중 봉쇄 전략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여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나. 국방력 강화

중국은 미국의 대중 군사적 포위 전략에 맞서기 위해 국방력을 대미 안보협력 증진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우선 중국은 미국의 핵위협 특히 미국의 선제 핵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실험을 지속적으로 강행하여 핵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방력 강화의 제1 목표로 삼아 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선제 핵공격 배제’를 천명하는 국가임을 강조하여 미국의 선제 핵공격 전략이 반평화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왔으며, 2005년 9월 럽스펠드 미 국방장관 방중시(9. 18~20)에도 ‘선제 핵공격’을 배제하고 있음을 재천명하였다. 중국은 자국의 ‘선제 핵공격’ 배제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 곳은 대만에 대해서임을 분명히 밝혔다. 중국은 일찍이 대만이 독립을 선포하거나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대대만 핵공격 가능성을 표명하여 왔다.

중국이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것 다음으로 전략미사일 능력 증

25. 중·미 양국은 2004년 이후에도 전략적 입장에서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岳喜田, “關於美國在朝鮮半島戰略的思考,” 岳喜田·張長力 主編, 『朝鮮半島問題研究論叢 二』, pp. 17~18.

강을 두 번째 목표로 삼고 있다. 중국은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방위계획(Missile Defense Program, MD)에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전략미사일 2차 공격 능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였다. 일본이 2004년 차기 [中期防衛力整備計劃, 2005~2009]에서 이지스함의 MD능력 확대,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 강화 등에 가장 큰 역점을 둔 것에 대비하여 중국은 우주선 발사, 인공위성 영상장치, 조기 경보 감지기, 전자부문 능력 확대를 통해 미·일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2007년 중국은 12,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신형 DF(Dong Feng, 東風)-31A의 실전배치에 앞서 2006년 말부터 ‘DF-31 표준형’도 배치하여 총 60기를 주요 거점에 배치하기 시작하였다.²⁶ 중국은 약 30기 정도의 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CBM)인 東風31-C, 다탄두 무기(MIRV)개발, 東風21-C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650~730기 정도의 CSS-6와 CSS-7 단거리탄도 미사일도 실전 배치되어 대만의 패트리엇(PAC-3)미사일 시스템의 대중 위협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2012년 작전 배치를 목표로 J-13, J-14 제4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고 항모형 수호이-33 전투기를 도입하고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를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²⁷

해군력 강화에 대해 중국은 잠수함 건조 사업을 1999년부터 시행하여 약 55~70척의 잠수함과 차세대 신형 핵잠수함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 실전 배치하여 2차 핵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²⁸ 또한

26. 『연합뉴스』, 2006년 7월 12일; 이규열,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77호 가을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94.

27. 『한겨레』, 2007년 5월 20일.

28. 『홍콩신보』, 2006년 7월 7일; 이규열,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77호 가을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90.

중국의 최근 군사력 동향을 참조하려면 이규열 논문 참조.



중국은 미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해 2020년경에 93,000 톤 규모의 핵 항공모함 실전 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상기 중국의 해공군력 강화를 위해 중국은 국방예산을 매년 경제 성장을 보다 더 많이 책정하여 왔다. 중국은 2005년에 약 299억 달러를 책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은 무기 구입비 등을 고려한다면 3배에 이르는 89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²⁹ 2007년도 중국의 국방예산은 전년대비 17.8% 증액된 약 450억 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예산 증액 분은 주로 신무기 구입에 쓸 것으로 예상된다.³⁰ 미국방부가 2007년도 중국의 국방예산이 1,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³¹ 중국의 국방예산은 실제로는 중국이 밝히고 있는 규모의 3배 정도로 추정된다.³² 무기 수입을 위해 중국은 2003년에 유럽연합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2004년부터는 유럽연합의 대중국 무기 수출금지 조치를 해제시켜 유럽연합으로부터 무기수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다. 주변국과 안보 군사협력 증진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안보협약과 협력을 지속해나가는 것을 안보전략 기조로 삼고 있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지속하는

²⁹ 平可夫, “中國軍備豫算的虛與實,” 『亞洲週刊』, 2005년 3월 20일. pp. 38~39; 이태환,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NSP Report*,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5. 5. 25), p. 11.

³⁰ *Xinhua*, June 3, 2007; “U.S. China Recognize Need For Continuing Military Cooperation,” *Itar-Tass*, November 6, 2007 (News Edge, Document Number: 200711061477.1_e79a002cf5531d23).

³¹ Jim Mannion, “China, U.S. Agree To Deepen Military Dialogue, Further Discuss Nuclear Issues,” *Radio Free Asia(AFP)*, November 5, 2007 (News Edge, Document Number: 200711051477).

³² *The Korea Times*, Internet Version May 20, 2007.

데는 두 가지 국가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 우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증진은 미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의 대중 군사적 봉쇄 노력을 전략적으로 견제시켜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둘째,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주변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이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 중 가장 중시하여 온 국가들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대량 구입하고 러시아와 공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가고 있다. 2005년 8월 중국은 러시아와 공동으로 육해공 병력 8,000명이 참가하는 사상 첫 합동군사훈련을 3단계로 나눠 실시하였으며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훈련임을 시사하였다.³³ 중국은 자국주변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미, 미·일 군사훈련이 자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중·러 대규모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적하였다.³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만 및 한반도사태에 미·일이 군사 개입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이라크 침공에 대해 공동으로 미국의 개입을 비난하여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과시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2007년 3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정치, 군사협력과 에너지 분야에 이르는 전반적인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국제문제에도 한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하

33. 『서울신문』, 2005년 7월 1일; 『문화일보』, 2005년 7월 8일; 『문화일보』, 2005년 8월 17일. 합동군사훈련에서 중국 측은 5,000명, 러시아 측은 3,000명이 참가하였다. 훈련지역은 산둥반도와 주변 서해, 블라디보스톡이며, 기간은 1주일이다.

34. 『解放軍報』, 2005년 8월 17일.



는 것이 국제문제 해결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히는 등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및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³⁵

한편, 중국은 2001년 6개국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CO)를 창설하여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지역안보에 대한 안보 협력 공감대를 확대하면서 이들 국가들과 경제협력 활성화를 구축해 나갔다. 2003년 처음으로 중국은 SCO 5개국 국가들과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한 후³⁶ 군사협력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송광카이 중국군 부참모총장은 “세계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상하이협력기구 등과 같이 다양한 지정학적임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의 이라크 무력개입 등 미국이 야기하고 있는 세계불안정과 경제후퇴는 중국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중국의 SCO와 대유럽 외교는 정당한 것으로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³⁷

라. 한반도 현상 유지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역내 안정이 유지되고 나아가 기존에 향유하여 왔던 자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지역안

35- 『동아일보』, 2007년 3월 28일. 양국 정상은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면서 북한과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고 미국의 대북 군사적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36- 『동아일보』, 2003년 5월 31일.

37-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16, 2003.

정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양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입장을 한국에 피력하여 한국과의 공감대를 넓혀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첫째, 한반도의 급격한 변화를 사전에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한국과 북한에 대해 정치 및 안보관련 협의를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왔으며,³⁸ 둘째, 중국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개입은 현 상태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것으로 파악하여 남북한 관계 개선을 적극 지지하여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한국과 관련, 중국은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인 2004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면서 양국간 북핵문제,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대한 공동의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갔으며 남북관계 진전을 어느 국가들보다 더욱 촉구하였다. 2007년 4월 김장수 국방장관은 차오깡촨(曹剛川) 중국 국방장관의 초청으로 방중하여 한·중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중국은 한국 국방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베이징 근교의 항공우주센터 방문, 중국 총리 접견, 상하이 해군기지 방문도 안내하였으며³⁹ 2006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된 해공군 직통전화 설치, 해군 탐색구조 훈련 등에 합의하였다.⁴⁰ 이어 2007년 11월 13일 김관진 총참모장의 방중시 차오깡촨 중국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총참모

38- 중국이 한반도에 펼치는 정책은 중국의 전통적인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을 유도하는 정책이며 아울러 중국이 일정 수준으로 한국과 정치관계를 진전하려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 일본, 혹은 러시아와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데 도움이 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洪停杓·張植榮 著, 『當代中國外交新論』, (香港: 勵志出版社, 2004. 3), p. 240.

39- 황재호·배재홍, “한·중 군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154호 (07-23)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6. 4), p. 1; *Xinhua*, April 24, 2007.

40- 『연합뉴스』, 2007년 2월 16일.

장은 6자회담에서 보인 중국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중국 국방장관은 평화공존 원칙아래 중국은 한국과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할 것임을 표방하여 양국 군사교류가 더욱 다양화 될 것임을 예고하였다.⁴¹ 2007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은 해상에서 우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합동 구조 활동을 위해 해·공군 직통전화를 설치시기를 조정할 계획에 있다.⁴²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경협 증대는 한반도 안정은 물론 자국의 국가이익에도 부합된다는 입장에서 교역, 투자, 기술 협력 확대를 모색하여 왔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밝힌 바에 의하면, 교역은 1992년 50억 달러에서 2006년 1,343억 달러로 26배로 확대되었으며, 2010년까지 2,000억 달러 교역 규모달성에 한국과 합의하였다. 이로써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며 2대 수입국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5대 수출국이며, 2대 수입국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 중국은 북한의 체제 안전과 안정을 통해 한반도 안정 유지, 한반도비핵화, 중·북 관계 증진 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안보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⁴³ 중국은 한반도 안정유지를 위해 북한에게도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

41. "China, ROK Vow To Strengthen Military Ties," *Xinhua*, November 13, 2007.

42. Yonhap, "JCS Chief To Visit China To Discuss Military Hotlines, Regional Security," November 12, 2007.

43. 중국학자 왕지스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순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북한의 안정을 포함한 한반도 안정유지가 가장 중요하며, 두 번째는 북한의 경제난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한반도비핵화 실현은 장기적인 목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Wang Jisi, "China's Changing Role in Asia," *Rational Reflec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06), pp. 309~310; cited from Jeong-Pyo Hong, "The Dragon Rises: Is China Going to Be a New Hegemon in East Asi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8, No. 2 (Seoul: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7), p. 438.

으로 임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북·일 관계 개선도 지지하여 북한의 의구심을 축소시키고 있다.⁴⁴

후진타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중국은 북한의 붕괴 방지와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평화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도 대북 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이를 뒷받침하듯 중단되었던 중국의 대북 군사외교는 2003년 8월 중국군 총정치부 주임의 방북을 기점으로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중국의 적극적 중재 역할 담당

중국은 북한의 핵 보유 노력이 자국의 위상에 직접적인 훼손을 가하는 처사이지만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자국의 이익이 보전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개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로 인해 역내 핵 확산이 초래되면 될수록 역내 안정이 훼손되고 기존의 핵독점 국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던 자국의 위상에 큰 손실이 될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핵문제가 군사적인 방법에 의해 해결될 경우 이는 역내 군사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외교적 제재와 타협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2002년 10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개발 계획이 지속되고 있음을 추궁하자, 북한은 농축 우라늄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을 암묵

⁴⁴- Fei-Ling Wang, "China and the Two Koreas: Conducts, Concerns and Constraints," p. 11. 왕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현상유지를 기조로 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책임 있는(responsible stake holder)' 대국으로서 안정된 중·미 관계 지속을 원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안정유지를 원한다는 목적보다 중·미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한반도 안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파악한 점이다.



적으로 시인함으로써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핵개발 의혹 제기에 대해 미국에게 직접 협상을 통해 해결하자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하고 관련국 특히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대북 영향력 행사를 주문하게 됨에 따라 중국은 북·미 간 협상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요구로 인해 중국의 소극적인 중재역할(mediating role)에서 적극적인 촉진역할(facilitating role)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은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북핵 실험 직후 유엔안보리의 경제 및 외교 제재 결의인 1718호 결의 채택에 동참하여 북한에 강력히 대응하였으며 탕자쉬옌(唐家璇) 부총리를 급파하여 김정일 위원장에게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지 말 것을 경고하여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당분간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 받아내었다.

III

중국의 대북 정책: 전개 및 현황



1. 전개

1989년에 등장한 장쩌민 제1기 정부는 천안문사태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⁴⁵ 북한과의 혈맹관계 존속에는 주저하였다. 반면 북한은 천안문 사태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올바른 노선이라고 지지하면서 양국이 미국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에 대한 전략적 입장 차이로 소원해진 중·북 관계는 1992년 중국이 한국과 수교함으로써 악화되기 시작하였다. 중·북 관계의 악화는 1992년 북한이 북경 올림픽대회 지지보다는 미국의 입장인 시드니 개최 지지를 투표한 데서도 나타났다.

중·미 안보 관계가 밀월을 지속하고 아울러 한·중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장쩌민 제2기 정부(1998~2002년 말)는 북한과 악화된 관계를 정상적인 관계 즉 실리 위주의 양국 관계 설정이라는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조정하려 하였다. 중·북 양국간 불신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여 북한에 대해 전통적인 친선 관계를 강조하거나 중·북 양국의 ‘혈맹 관계’를 강조하였으나 북한이 이를 믿지 않아 중국의 표명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lip service’에 불과하게 되었다.

북한은 갈수록 경제난이 심화되고 아울러 대외 관계에서도 고립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과의

45. 1989년 천안문사태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중국은 급히 아시아 국가들과 수교를 단행하는 조치를 내렸다. 1989년까지 외교관계가 없었던 국가들과 정식 수교협상을 추진하였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한국과 싱가포르와의 수교 협상이 대표적이다. David S.G. Goodman, “Can China Change,”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Regional Challenges*, edited by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et. al.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pp. 254~255.

관계 개선을 동시에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대중국 정치관계를 본격적으로 복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3월 김정일 위원장이 주북(駐北) 중국대사관을 방문해 중국과의 친선관계를 직접 표명하고 이어 2000년 5월 17년 만에 처음으로 베이징을 비밀 방문하여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부터였다. 김정일의 방중 배경의 또 다른 이유는 2000년 6월 남북한 평양 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이후 중국은 2000년 9월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黨대외연락부장이 6년 만에 방북하여 ‘전통적 친선관계’ 발전을 강조하였으며 이어 중국 군부의 방북이 대거 추진되었다.

2001년 1월 부시 미행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중국은 북한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고위급 인사의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북한측 당 관련 고위 인사의 방중은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비공식 방문을 제외하고는 2002년까지 거의 없었다. 2001년 1월 김정일의 방중 기간 개최된 중·북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이 정확하였음을 지지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가. 후진타오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지향

북·미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고 북한이 대한민국 관계개선에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 정책과 중·북 관계 개선 노력은 장쩌민 시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대미 군사력을 강화하

고 동북아의 안정을 도모해 나간다는 두 가지 전략 기조를 가장 큰 비중으로 한반도에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대북 협력 확대를 통해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고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한다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중국은 양국관계가 진전되면 될수록 한반도 비핵화가 평화적으로 실현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대해 최소한의 식량과 원유 등만을 지원함으로써 양국관계가 크게 진전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앞으로는 경험 확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003년 초 중국은 대북 정책을 “전통계승(繼承傳統), 미래지향(面向未來), 선린우호(陸隣友好), 협력강화(加強合作)” 라는 ‘16자 방침(十六字方針)’을 천명하였다. 중국은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북한과 합의하에 모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양국 관계가 ‘전략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것임을 표방하였다. 후진타오 정부는 실로 장쩌민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양상으로 북한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진타오 정부가 ‘16자 방침’을 표명한 것은 기존의 대북 정책 방향을 계승하고 있음을 표명하고 양국의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 데 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북한과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다. 또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경험 등 4대 발전방안을 북한에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고위급 인사의 교류 활성화, 협력분야의 다양화, 경험활성화와 공동발전, 상호협력정신으로 공동이익 옹호” 등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후진타오 주석의 제안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이 전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중국 측은 보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이 전적으로 지지하였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어 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

I

II

III

IV

V

다. 주목할 점은 중국이 ‘공동이익의 옹호’라는 새로운 개념의 협력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국이 북한에게 제시하는 것이 공동이익이라고 강조할 경우 북한이 중국의 입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 점이다.

2. 현황

가. 중국의 대북 정치, 안보 협력: 6자회담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하여

중국이 대북 정치, 안보 관계 강화를 통해 얻고자 한 것은 무엇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의 이견을 줄여 북한을 자신의 논리로 설득하려는 데 있었다. 중국은 고위급 인사를 북한에 파견하고 고위급 북한 인사의 베이징 방문을 촉구하였다. 2003년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기 직전까지 중국이 북한에 파견한 고위급 인사들은 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파견이 대부분이었다. 장쩌민 시기에 중국이 양국 관계의 전통적인 복원을 희망하는 ‘lip service’에 가까운 ‘혈맹 관계’를 강조하였다면 후진타오 시기는 6자회담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중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치중한 ‘실무적인 협의 관계’라 할 수 있다.

2003년 8월 북한이 제1차 6자회담에 참여하자, 중국 군부는 북한 군부와와의 교류와 사전 협의 혹은 사후 정책 설명이 시급해졌다. 중·북 양국 정상회담과 고위급 인사들의 회담이 이어져 개최되었으며, 특히 중·북 정상회담은 장쩌민 시대와는 달리 빈번하였다. 당시 북한이 중국의 제안인 고위급 인사의 교류에 응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권유하는 6자회담 참여를 북한이 수용하는 대신에 중국으로부터 정



치, 군사안보, 경제협력 등에서 많은 지원을 받으려 한 데 있었다. 북·미 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6자회담 참여를 수용함으로써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여 온 중국과 한국의 입장이 관철된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수용하면서도 핵개발을 지속하였으며 특히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초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고⁴⁶ 이어 10월 초에 핵실험을 도모함으로써 후진타오 정부가 추진하였던 대북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여온 중국의 정책은 제고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되었다. 왜 북한이 중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였는가? 북한은 미국의 소위 ‘압살정책’으로 자신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핵실험을 하여 핵보유 국가로 표방될 때 미국은 자국과의 협상에 진지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이전과는 달리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2006년 10월 초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에 중국이 찬성한 것은 무엇보다 중국이 한반도 안정 유지에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행동한다는 것과 미국과 함께 전략적 대화와 합의를 전개하는 것이 더욱 긴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 중국

46. 7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실험에 대해 중국은 7월 15일 유엔 대북 결의안 1886호에 찬성표를 행사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함”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당시 북한의 행위도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민감히 군사적으로 대응하려는 행동도 정세를 긴장시키는 것으로 밝혀 미국 주도의 강경한 군사 대응을 사전에 억제하려 하였다. 제1차 핵위기인 1993년 5월 11일 유엔의 대북 결의안 825호에 기권한 것과는 다른 강경한 태도를 중국이 보인 것이다.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공동성명 후 북핵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pp. 86~87; 중국외교부, “外交部發言人姜瑜就聯合國安理會一致通過朝鮮試射導彈問題決議發表談話,” 2006年 7月 16日.

은 6자회담틀 내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북·미 직접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중재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결의하자, 북한은 생존의 위협을 느껴 2007년 2월 6자회담에 참여하게 되고 2월 13일 6개국은 2·13제안에 합의하였다. 2·13합의 직후인 2월 15일 류샤오밍(劉曉明) 주 북한 중국대사는 북한에 대해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여 6자회담에서 중·북 양국의 협력 하에 핵문제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류 대사는 김영남 북한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춘 인민군 총참모장 등 11명의 북한 당, 정, 군 간부들과 함께 봄 환영회를 열고 양국이 정치, 경제, 과학, 문화, 교육 등 각 방면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 양국 간의 전통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협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⁴⁷고 언급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추구와 북·미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2007년 6월 15일 BDA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자, 7월 3일에는 중국 외교부 부장 양제츠(楊潔篪)가 방북하여 북한 노동당 총서기 김정일과 공식회담을 가졌다. 당 회담에서 양제츠 부장과 김정일 총서기는 “중·북 양국 간 우의는 양국의 공통된 고귀한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각 영역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전면적인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밝혀⁴⁸ 양국이 북핵문제

47- “朝党政軍領導人出席我駐朝使館迎春招待會,” 주북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2007년 2월 15일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09903.htm>>.

48- “朝鮮勞動黨總書記金正日會見楊潔篪外長,” 주북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2007년 7월 3일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36597.htm>>.

해결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임을 표방하였다.

구체적으로 양제츠 외교부 부장의 방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 첫째, 중국이 북한과 함께 각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확대시키기로 합의한 점이며, 둘째, 중국이 2·13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북한으로부터 다짐받은 것이 성과이다.

주목할 점은 김정일의 호칭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된 점이다. 7월 10일 외교부 대변인 담화에서 중국 외교부 사이트와 신화사가 7월 3일 양제츠 외교부 부장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김정일의 직책을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조선노동당총서기’라고 표기한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질문자가 너무 민감한 것이라며 중국은 이 문제에 대하여 항상 일관된 명칭을 사용하였고,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⁴⁹ 이러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당 대 당’ 정치관계, ‘당과 국가’ 관계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대북 군사협력과 관련, 중국은 2007년 초부터 대북 군사 교류를 재개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상반기까지 없었던 양국 간 군인사 상호 방문은 2·13합의 이후 두 차례나 이루어졌다. 군인사 상호 방문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처음으로 실현된 것으로써, 중국이 대북 군사 교류를 통해 북핵문제에 대해 상호이해의 폭을 증진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총참모장인 양광리에(梁光烈)가 2007년 3월 27일 북경에서 북한 인민무장력량부 외사국

49- 外交部 發言, “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7월 10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38842.htm>>.

국장 안영기가 이끄는 북한인민군대표단을 면담하였다. 양광리에 중국 인민군 총참모장은 중국과 북한 양국은 수년간 군사적으로 밀접한 교류와 협력을 지속했고, 이를 통해 양국 군대가 발전했다고 평가했으며, 군사적 협력은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양광리에는 북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중국군의 국내 경제건설 역할에 대한 현황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영기 북한 국장은 중·북 양국과 양국 인민은 매우 깊은 전통적 우호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양국의 우의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하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양국 군대가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지역의 발전과 안정에 더 많은 공헌을 할 것에 합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⁵⁰ 중·북 군사 우호 협력관계 발전에 대한 공감대는 7월 4일에 있는 주북한 중국 대사 류샤오밍과 북한 신임 인민군 총참모장 김격식 대장과의 만남에서도 재확인되었다.⁵¹

요약하면, 2007년 2·13합의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실질적으로 BDA문제가 해결되자, 중국은 그동안 북핵 실험으로 악화되었던 대북 관계를 급격히 복원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7월 3일 양제츠 외교부 부장과 김정일 총서기와의 대화를 통해 양국은 경제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장기간 동안 없었던 군사교류를 다시 시작함으로써 양국관계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다.

50. “梁光烈會見由安永基率領的朝鮮人民軍代表團,” 주북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2007년 3월 29일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07165.htm>>.

51. “中國駐朝鮮大使劉曉明拜會朝新任總參謀長,” 주북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2007년 7월 4일 <<http://kp.china-embassy.org/chn/zcgx/gchf/t336800.htm>>.

나. 중국의 대북 경험: 확대 추진

후진타오 정부는 자국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하면 할수록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으며, 둘째,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확대하여 대북 영향력을 지속할 수 있으며, 셋째, 북한을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중국의 대북 경험을 교역, 투자, 지원 면에서 알아보자.

(1) 중·북 교역

중·북 교역과 관련, <표 III-1>에서 보듯이 1990년대 중반부터 1999년까지 북한의 대중 교역액은 평균적으로 약 4,800만 달러 수준이며 거듭해서 적자를 기록하였다.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중·북 교역은 연간 평균 교역 증가율이 남북한 교역 신장률보다 2배 정도로 급속히 확대되어 왔다. 한국의 KOTRA에 의하면, 특히 2002년부터는 중·북 무역액은 매년 30%씩 증가하여 2003년에 10억 달러, 2004년에는 14억 달러, 2005년에 16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2005년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약 10.8억 달러, 중국의 대북 수입은 약 5억 달러 규모로 중국이 약 5.8억 달러 상당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통계는 중국의 통계와 비슷하다. 중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북 무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2년부터는 이전의 3~7%에 머물던 교역 신장률이 10%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평가하였다.⁵²

⁵² Dunqiu L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Nautilus* (2006). 중·북 무역 신장률을 중국은 1997년에는 6.5%, 1998년 4.1%, 1999년 3.7%, 2000년 4.8%, 2001년 7.37%, 2002년 7.33%, 2003년 10.23%, 2004년 13.85%, 2005년 15.8% 증가로 평가하고 있다.

<표 III-1> 북한과 중국의 교역상황(1997~2005년)
(단위: 억 달러)

년도	북한 총 교역액	북한-중국 교역액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전체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한국포함)/한국 비포함
1997	21.7	6.5	5.3	1.2	29%
1998	14.4	4.1	3.5	0.6	28%
1999	14.8	3.7	3.2	0.5	25%
2000	19.7	4.8	4.5	0.3	24%
2001	22.7	7.4	5.7	1.6	32%
2002	22.6	7.3	4.6	2.7	32%
2003	31.1(23.91*)	10.2	6.3(#3.9)	3.9	32%
2004	35.5(28.57*)	13.6	-(#5.8)	-	39% / 48%
2005	40.5	15.8	10.8	5	39% / 52%

출처: KOTRA, Nautilus.org에 기재된 Liu, Dunjia,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참조

- * 中國海關叢書(Custom General Administration, PRC), 중국세관통계 각 연도.
- * KOTRA 중국무역통계자료로서 Nautilus에 기재된 Liu, Dunjia의 분석과 다름.

<표 III-1> 에서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2001년 이전에는 20%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1년을 시작으로 전년대비 8% 증가하여 30%대로 진입하였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을 제외하고는 북한 전체 대외 교역의 절반을 점하였다.⁵³ <표 III-1>에서 북한과 한국의 교역을 제외하면 북한의 대중 교역 비중이 48~52%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 역시 2000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 중국은 2004년도에 이어 2005년에도 북한의 제1위 교역상대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중·북 교역이 북한 대외 교역의 52.6%를 차지하는 등 중국은 이미 북한에 있어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교역 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⁵⁴

53- 최춘흠,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57.



주목할 점은 교역 규모로 볼 때, 양국간 경험은 이전보다 확대되었으나, 호혜원칙이 잘 적용되지 않은 점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계속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와 함께 중국의 독점적 위상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의 의존적인 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북 양국의 수출 품목을 보면, 북한은 중국에 주로 무연탄, 철광석, 어패류 등을 수출하였으며 이들 상품이 경쟁력이 적어 수출 확대에 어려움이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대중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무역 적자도 누적되어 결과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확대하는데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북 경험 확대 촉구에 대해 북한 역시 6자회담이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경험이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에서 대중 경험 확대를 추진해 나갔다. 중·북 양국의 경험확대는 김정일 위원장이 1월 10일부터 18일까지 중국을 비공식 방문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되었다. 그 후 북한의 방중 인사들은 중국방문 기간 내에 자국의 개혁 개방 의지와 대중국 경제협력 의지를 표명하여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 확대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중국이 대북 금융거래와 투자 사업을 잠정 중단하자, 양국간 경험은 축소되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서도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을 고려하여 변경무역만은 공식적으로 중단하지 않았다.

54. 중국 해관통계에 의하면 2005년도 중·북 교역액은 북한의 전체 교역액의 3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2) 2·13합의 이후

2007년 2·13합의 직후인 2월 27일 중국 외교부는 중·북 경제무역 관계는 반드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한다는 입장과 중·북 간의 공동이익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중국의 이웃나라로서, 북한의 경제와 사회가 충분히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⁵⁵ 중국은 2·13합의 실현으로 북한과의 경협은 한반도 안정과 중·북 공동이익에 기초하여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혀 향후 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대북 경협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이 대북 경협을 한반도 평화와 안정 보호라는 입장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중국은 중국의 대북 경협은 북한의 안정을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크게 강조하였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입장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중국은 대북 경협은 마치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맞게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중국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는 조치인 불능화 조치에 맞춰 대북 경협을 추진할 것임을 표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3월 27일 미국의 BDA 동결 조치에 대하여 자국은 기술상의 문제에만 관여하였기 때문에 BDA 동결 조치에 찬성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 2·13합의로 자국이 북한과의 경협을 재개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5월 15일 북한의 제 10회 평양 봄 국제상품 전시회를 계기로 대북 경협이 진전되었다. 북한의 고위급 간부 및 주북한 중국대사 류샤오밍이 전시회에 참가하여 세계 14개국의 상품을 관람하였다. 이어 7월 3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을 방문, 북한 외무상 박의

55. 外交部 發言, “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 담화, 2007년 2월 27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99837.htm>>.



춘과의 회담에서 양국은 경제협력을 다시 강조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한 보 더 잠재력을 발굴하고, 호혜적인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인민의 행복을 만든다(進一步挖掘潛力, 加強互利經貿合作, 造福兩國人民)”라는 회담 결과를 발표하였다. 아울러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김영일 북한 내각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이 우호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는다고 밝히고, 북한의 의견에 동의하여 양국 영수의 공통인식을 구체화시키고, 이를 통해 양국관계를 더욱 풍부하게 하여 결실을 거두자고 말했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은 향후 북한에 대해 “정부가 인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며, 시장이 운행한다(政府引導, 民間參與, 市場運作)”라는 원칙아래 각 분야에서 다양한 양국간 협력이 실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김영일 북한 총리는 북한은 중국과의 우의를 중요시하며, 전통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과 동시에 평등호혜의 원칙에서 전략적으로 양국의 경제무역관계를 바라보면서 양국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겠다고 말해⁵⁶ 양국이 경협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다짐하였다. 중국이 시장중심의 대북 경협을 강조한 반면에 북한은 평등호혜의 원칙을 강조하여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중 교역 수지 적자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대북 경협 확대 중요성은 주 북한 중국대사의 행보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9월 6일 주 북한 중국대사 류샤오밍은 북한 무역성 부상 이명산과 세관부국 부 중국장 김의준 등 관련분야 인사들을 초청, 중·북 경제무역관계가 적극적으로 발전한 데에 대하여 감사를 표

⁵⁶ 外交部 發言, “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답화, 2007년 7월 3일.

하였으며, 앞으로도 부단한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였으며 10월 15일과 16일에는 류 대사가 함경북도를 공식 방문, 라선시의 라진항, 라선신흥연초회사, 청진항, 청진금속합영회사를 시찰하였다. 아울러 류 대사는 함경북도가 중·북 무역관계, 특히 변경 무역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홍석형 함경북도 책임비서와 박수길 도인민위원장과 함께 길림성과 함경북도의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고 관련 경제무역 협력항목을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중점적으로 교환하였다.

2·13합의 전후 중·북 교역과 관련, <표 III-2>에서 보듯이 2005년에 16억 달러에 달하였던 중·북 양국간 교역액은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증가율이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2006년도 중국의 대북한 수출은 12억 3천만 달러로 2005년 대비 14% 증가하였고, 수입은 4억 7천만 달러로 6.3% 감소하였으며, 교역총액은 17억 달러로 2005년도에 비하여 7.6% 증가하였다. 2005년도에 이어 2006년도에도 중국은 북한의 제1위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북한이 2007년 2·13합의에서 핵불능화 조치에 합의함으로써 중·북 교역이 신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1~8월까지의 양국간 교역 총액은 12억 5천만 달러로 2006년에 비하여 16.7%로 증가하였다. 중국의 대북한 수출액은 8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하였고, 수입은 3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37.8% 증가하여 수입 증가율이 수출의 4배에 달하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2007년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6년도에 비하여 수출입 총액이 16.7%나 증가하여 양국 교역관계가 회복됨과 동시에 확대되고 있는 점이다.



<표 III-2> 중국의 대북 교역액

(단위: 만 달러)

년도	수출		수입		수출입총액	
	금액	동기대비	금액	동기대비	금액	동기대비
2005년	108,118	35.2%	49,916	-14.8%	158,034	14.1%
2006년	123,237	14.0%	46,778	-6.3%	170,015	7.6%
2007년 1~8월	86,256	9.2%	38,842	37.8%	125,098	16.7%

출처: 중국상무부 <www.mofcom.gov.cn>.

(3) 중국의 대북 투자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2년 북한의 7·1조치 이후 기업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비즈니스관행이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왔다.⁵⁷ 특히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중국의 대북 투자와 건설협력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6년 3월과 10월 중·북 양국은 각각 1개소씩 총 2개소의 양국간 국경을 연결하는 ‘녹색통로’를 개설하였으며 4월 12에는 압록강에 새로운 다리를 건설하는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제안을 북한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용하여 위치선정 및 경비부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였다.⁵⁸ 또한 5월에는 중·북 양국은 압록강 중류에 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합의하였다. 중국이 부담하는 북한의 발전설비 건설에

57- 조명철·정승호, “북핵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7권 22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 27), p. 3.

58-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p. 128~129에서 재인용; *Xinhua*, April 12, 2006; 『연합뉴스』, 2006년 4월 13일; 『동아일보』, 2006년 10월 2일. ‘녹색통로’란 기본적으로 양국 국경 통관 편의를 제공하는 통로로서 이 통로를 이용하는 사람과 물품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및 통관비용을 면제하는 통로이다. 중국은 녹색통로를 통해 동해를 거쳐 동북아 주변국으로 진출하는 근거리 해상통로를 확보하였으며, 또한 급증하는 북한의 철광석 반입을 원활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중·북 양국이 부분적으로 통관의 간소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물자반입과 수출의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약 5억 위안 규모의 비용이 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⁹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 투자 증가세가 잠시 주춤해졌다가 북한이 불능화 조치 약속이후 투자가 재개되고 여건도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4월 10일에는 중·북 평양 합영사료 공장이 생산에 들어갔으며, 4월 26일에는 평양-베이징 노선 중국 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의 주3회 운항이 재개되었다. 2008년 1월부터는 중국항공(China Air)도 주3회 베이징-평양 노선을 운항할 예정에 있어 중·북 양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지에서 오는 북경 방문객들을 평양에 쉽게 관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⁶⁰

중·북 양국은 투자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7월 11일 평양에서 ‘중·북 경제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2005년 3월에 체결된 중·북 투자보호협정에 이어 양국간 투자촉진과 기술협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중·북 양국이 국가차원에서 투자와 기술협력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중국기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투자 양상 역시 다각적이고도 다면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대북 투자 규모와 관련, 2005년에는 5,370만 달러, 2006년 상반기에는 5,870만 달러가 투자되었다.⁶¹ 지역별로는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투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길림성이 북한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23개에 이르며, 총 투자액이 5,164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⁶²

⁵⁹- 『연합뉴스』, 2006년 5월 15일.

⁶⁰- “Air China To Launch Direct Flight To Pyongyang in January 2008,” *Xinhua*, November 18, 2007.

⁶¹- 중국은 2007년 상반기 투자액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대중 투자는 처음부터 미약하였다. 2005년까지 중국 상무부에 투자계획을 신고(등록)한 북한기업 수는 443개이나, 이 가운데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는 기업은 200개 이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기업의 대중 투자는 주로 소규모 투자이며 지역별로는 동북3성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다.⁶³ 2005년 경우 실제 투자액은 130만 달러에 불과하여 중·북 양국의 투자가 오직 중국의 대북 투자로만 형성되는 매우 편향되고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주목할 점은 첫째, 중국의 대북 투자는 중국의 슬로진인 ‘북한의 로(路), 항(港), 구(區)의 일체화 실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목표아래 북한의 교통시설 개선, 특히 훈춘-나진 연계개발과 단동-신의주 연계 개발에 치중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는 점이며, 둘째, 중국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자국 산업에 긴요한 무연탄, 철강석 등 에너지 수급을 위해 대북 독점 개발권 확보에 치중하고 있는 점이며,⁶⁴ 셋째, 중국이 북한의 항만개발 독점권을 확보하는 투자 방식이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획득을 위한 대북 교역과 투자에 더욱 치중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대북 사회간접시설(SOC) 지원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첫째, 10월 20일 중국의 탕산(唐山)철강이 북한의 김책시(市)에 연간 150만 톤 생산 규모의 제철소와 60만kw급 석탄 발전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둘째, 11월 9일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이

⁶² “中國吉林省將積極開展對朝經貿合作,” 『人民日報』, 2007年 6月 21日.

⁶³ 조명철·정승호, “북핵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7권 22호, p. 4.

⁶⁴ Yonhap, “North Korea’s Dependence on China for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Further Deepening,” Internet Version October 22, 2007.

북한 주도로 설립된 다국적 투자회사인 대풍국제투자그룹과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기금을 조성해 북한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을 지원 키로 의향서를 체결하였다.⁶⁵ 중국이 북한의 도로, 철도, 항만 등 주로 SOC 분야에 진출하는 자국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중국 기업의 북한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이 이처럼 대북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북·미 관계가 진전되고 있어 북한 정세가 점차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한 점과 한국과 미국의 대북 투자가 본격화되기 전에 사전에 대북 투자 거점을 선점하여 이득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⁶⁶

(4) 중국의 대북 경제 지원

1990년대부터 중국은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의 생존을 지속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을 매년 지원하여 왔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인 10월 24일 중국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대북 원유 및 식량 지원을 지속할 뜻을 표명한 것은 북한의 생존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정부가 지원규모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알 수는 없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은 북한이 소비하는 원유의 약 70%(약 50만 톤)와 식량(40만 톤)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6년에도 중국은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약 4,500

⁶⁵ “China Development Bank Denies ROK Report on \$10 Billion Fund in DPRK,” *Radio Free Asia*(AFP), November 14, 2007. 그러나 정작 중국개발은행은 상기 보도를 부인하고 있다.

⁶⁶ 『내일신문』, 2007년 11월 13일. 대풍그룹은 북한의 국방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와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가 주축이 돼 홍콩에 설립한 다국적 투자회사이다.



만 달러 규모의 무상 경제 지원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핵 실험이후 중국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대북 송유를 지속하고 있으나 교역차원의 대북 석유를 감소된 양으로 수출하였다. 2007년 상반기의 대북 원조 규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8월 북한 수해 복구를 위하여 중국정부가 긴급의료품을 무상으로 원조하기로 결정하여 모든 구호품을 이미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언급한⁶⁷ 것으로 보아 2007년도 대북 지원 규모는 2006년도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해서 중국의 대북 경험 활동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양국 교역관계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이다. 중·북 양국 교역은 2005년까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 왔으나,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주춤하였다. 2·13합의 이후 중국의 대북 교역이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2007년 상반기의 무역이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은 추세가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미지수이지만, 중·북 교역관계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은 명확하다.

둘째, 중국의 대북 수입이 2007년도 상반기에 37.8%의 증가율을 보인 점에서 북한의 대중 수출이 확대되고 아울러 교역액이 2006년도를 초과하여 더욱 신장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중·북 교역의 회복세는 향후에도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다. 1991년 이래 중국은 북한의 제1

⁶⁷ “中國政府向朝鮮政府无償提供的緊急救災医療物資全部交付完,” 주북한 중국 대사관 사이트, 2007년 9월 27일 <<http://kp.china-embassy.org/chn/zcgx/jmhzt372174.htm>>.

무역 대상 국가로써, 2006년과 2007년에도 이러한 위치가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자체가 북한이 중국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2005년 이후부터는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북한의 산업 생산체제 역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에너지, 설비와 부품 등을 공급받아야만 돌아가는 만성적인 의존구조로 고착되고 있는 점이다.⁶⁸

⁶⁸ 조명철·정승호, “북핵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7권 22호, p. 13.



IV

6자회담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에 찬성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여러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13합의에서 6자회담 참여국들은 한반도비핵화, 대북 에너지 및 경제지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수교 협상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실현 등에 대해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입장과 정책을 전개하여 왔으며 추진할 것인 지 알아보고자 한다.

1. 한반도비핵화

중국은 마오쩌둥(毛澤東) 시기 때부터 현재까지 한반도비핵화를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전술핵 철수를 요구하고 김일성의 요구인 핵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왔다.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함에 따라 한반도비핵화 원칙이 심각히 훼손되고 북·미 관계도 극도로 악화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였다.⁶⁹

북한은 미국의 거듭되는 대북 압력은 결국은 미국이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03년 1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였다. 1월 10일 장쩌민 중국 국가 주석은 부시 미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NPT 탈퇴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나아가 중국은 2003년 2월 12일 IAEA

⁶⁹ 중국이 한반도비핵화를 주장하는 이면에는 한반도비핵화가 무효로 갈 경우 대만의 핵무장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판단하는 중국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안보리의 표결에 부치자, 이를 찬성하여 북한의 핵보유 노력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후진타오 정부 출범 직후 후진타오 주석은 6자회담의 유효성을 강조함으로써 자국의 대북 협상력이 강화될 필요성을 크게 염두에 두었다. 중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3차 회담까지 별 다른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난항을 거듭하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이 북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핵무기 개발 계획을 폐기하기를 촉구하기 시작하였다.⁷⁰

2005년 9월 19일 4차 6자회담에서 북한을 포함한 6개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9·19공동성명의 핵심은 제1항의 합의였다. 6개국은 평화적 방식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 회담의 목표라는 데 전원 합의하였다. 4차 회담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빠른 시일 내에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협정에 복귀할 것을 공약”하였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북한이 ‘평화적 핵이용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중국의 격렬한 대미 협상으로 부시 미행정부는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권’을 공동성명에 삽입토록 하는데 동의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후진타오 정부는 북·미 양국이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로 역내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다.

⁷⁰- 2002년에서 2003년까지 중·미 관계는 아주 원만한 관계에 있었으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미 양국은 거의 같은 보조로 핵문제 해결에 나섰다. 중국은 최고 지도자 교체시기에도 대미 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추진되었으며 북핵문제 역시 이전과 같이 추진되어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마저 보인 것이다. He Xingqia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Sino-American Relations: A Chinese Perspective,” 『국방정책연구』, p. 63~84. 2003년 11월 콜린 파웰 미국무장관은 2003년도 중·미 관계를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He Xingqia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Sino-American Relations: A Chinese Perspective,” 『국방정책연구』, pp. 70~71.

북한이 중국과 여러 국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미국은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입장에서 유엔주도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에 주력하였다. 미국의 유엔주도 대북 무력 제재 움직임에 대해, 중국은 2006년 10월 북핵 실험이 한반도 비핵화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유엔안보리의 대북 무력제재를 제외한 외교 및 경제 제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중국외교부는 북한이 “제멋대로 핵실험을(悍然實施核試驗)”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북한의 처사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⁷¹ 그러면서도 중국은 무력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하여 무력제재를 제외한 유엔의 대북 외교적, 경제적 제재 결정에 찬성한 것이다. 동시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참여하면서도 자국이 중재하여 왔던 6자회담의 유효성을 줄곧 강조하여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만 하면 북한의 핵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하여 대북 제재가 한시적임을 밝혔다. 중국이 대북 경제 및 외교 제재가 한시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직까지 협상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 능력을 아직 초보적인 핵폭탄 제조 능력만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왜 중국이 유엔주도의 대북 외교 및 경제제재에 찬성하였는가? 그 이유는 첫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안정보다 북한의 핵무장이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크게 훼손할 것으로 중국이 판단한 데 있으며, 둘째,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이 미국의 대북 무력

⁷¹ 북한은 핵실험 시작 20분 전에야 중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武斌紅, “朝鮮核試驗後的局勢變化與走向,” 岳喜田·張長力 主編, 『朝鮮半島問題研究論叢 二』, pp. 53~54.

제재를 억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본 것이며,⁷² 셋째, 북핵 실험 자체가 자국의 중재역할에 직접적으로 도전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압력을 통해서라도 9·19공동성명에 약속된 것을 이행시켜야 된다고 본 것이다.

북한이 6자회담 보다는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자고 하자, 미국은 북한과 양자협상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6자회담틀 내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 계획은 중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중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주장하여 중국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하려는 데 있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북·미간 직접 협상과 6자회담이 병행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회담 참여국이 북한의 정권안전을 보장하고 평화적인 핵 이용을 허용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가. 2·13합의 이후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억제하는 한편 미국, 한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관련국들과 협의를 통해 외교적 중재노력을 가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게 되고 2007년 2월 13일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2·13합의)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2·13합의는 9·19성명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행동대 행동’ 조치를 담고 있다.

⁷²- Joseph Kahn, "Beijing Weighs Reducing Oil Shipmen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20, 2006.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면 원유를 비롯한 각종 경제원조 중단과 북한에 대한 미국 조도의 군사적 제재가 있을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북한을 지원할 의무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합의된 중요한 초기단계 이행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핵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과 IAEA의 사찰을 허용하는 핵불능화 조치이며, 둘째,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에 대해 미국은 테러지원국 북한 지정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과정 진전에 노력하며, 아울러 북·미, 북·일 수교협상을 개시하며, 셋째, 대북 중유 5만 톤을 60일내에 지급하도록 합의하고, 넷째, 중국과 한국이 각각 비핵화와 에너지 및 경제협력 분야의 의장국 역할을 맡으며, 다섯째, 2·13합의에 따라 설치되는 5개 실무그룹은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 뒤 그 결과를 2007년 3월 19일 개막하는 차기 6자회담에 앞서 각국 수석대표들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⁷³

2·13합의 직후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2·13합의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면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첫째, 이번 합의는 한반도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효한 방안이며, 둘째, 동북아 새로운 질서를 위해 대화와 협상으로 국제쟁점을 해결한 것이며, 셋째, 계속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하고, 관계국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각 국가의 이익에 부합하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⁷⁴ 2·13합의 직후인 2월 15일 중국외교부도 6자회담 성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다.⁷⁵ 또한 실무그룹과 관련하여 중국외교부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지원일정 및 내용을

73. 『중앙일보』, 2007년 2월 28일.

74. 『人民日報』, 2007년 2월 14일.

75. 外交部發言, “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중국 외교부 사이트 대변인 담화, 2007년 2월 15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298043.htm>>.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혀⁷⁶ 합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2·13합의가 도출되는 데 중국의 역할이 지대하였다. 무엇보다 중국은 북·미간 중재역할을 하면서도 북한이 자국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과 함께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단호함을 보였기 때문이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첫째,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BDA(Banco Delta Asia)은행의 북한자금을 동결하는 데 중국이 협조하였으며, 둘째, 중국이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국제사회가 충분한 보상을 할 것이라고 설득과 압력을 구사하였으며, 셋째, 미국에게도 북핵문제는 북·미 양자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자관계로 풀어야 한다고 역설한 이유로 분석하였다.⁷⁷ 즉, 중국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중국의 유엔 대북 제재 참여) 북한에 대해 보상하는 핵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2·13합의 전까지 ‘선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방안만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수용하지 않아 6자회담에서 합의가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의 불법자금 조달을 돕는 은행으로 지목된 마카오 소재 BDA(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한 동결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실무회의가 열리지 못해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었다. 북한 계좌 동결조치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대북 경제 지원을 공약했음에도 북한의 원활한 해외자금 활동을 막는 처사는 실제로 대북 ‘압살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 측

76. 外交部 發言, “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2월 15일; 外交部 發言 “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3월 13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03292.htm>>.

77. 『중앙일보』, 2007년 2월 19일.

에 BDA 동결문제에 대한 관철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였다.⁷⁸ BDA 동결문제로 중국은 6자회담의 기본원칙과 마카오의 금융질서보호라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3월 17일 북핵문제 실무그룹 회의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에 대한 깊은 논의가 이루어진 데에 대하여 좋은 출발이라고 언급하고 논의 결과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다음 회의에서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⁷⁹ 또한 중국 외교부는 6자회담 관련국의 합의하에 IAEA의 건설적인 역할이 긴요하다고 표명하여 IAEA의 북한 사찰이 임박하였음을 예고하기도 하였다. 3월 20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BDA 자금의 북한 반환)조건이 충족되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한 후 바로 IAEA(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중국 외교부는 역시 2·13합의에 의거한 북한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6자회담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⁸⁰

BDA문제가 9·19공동성명의 초기행동 만기시간인 60일내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언론에서 제기되었다. 회의론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6자회담은 본래 평탄한 과정이 될 수 없으며 많은 곡절을 겪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밝히고,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지연이 6자회담 혹은 2·13합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하여 6자회담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2·13

⁷⁸ 外交部 發言, “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3월 15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03794.htm>>.

⁷⁹ 外交部 發言, “人劉建超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3월 20일.

⁸⁰ 위의 글.

합의에서 도출된 공통된 합의내용은 기간보다는 목적에 있는 것이므로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6자회담의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하였다.⁸¹ 특히 BDA 자금 이체문제가 3월 말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중국외교부는 이 문제 역시 9·19공동성명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⁸² 또한 BDA문제가 중·미 관계의 악화를 가져올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 문제는 북·미 양국의 문제이며, 중국은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협조를 담당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중국의 상기 입장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진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서도 강조되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국가의 관계정상화는 각 국가의 공통된 목표이며, 동아시아 지역에서 어떠한 형식의 냉전도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⁸³ 그는 또한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서 6자회담 및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월 30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회담에서도 중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6자회담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⁸⁴

81. 外交部 發言, “人劉建超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4월 10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10171.htm>>.

82. 外交部 發言, “人劉建超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3월 27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06756.htm>>.

83. “李肇星接受記者採訪談溫家宝總理訪問韓國和日本,” 중국국무원 사이트, 2007년 4월 15일 <http://www.gov.cn/zwjw/2007-04/15/content_583493.htm>.

84. 外交部 發言, “人姜瑜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4월 10일

BDA문제가 진전이 없자, 중국은 한국, 일본과 협의를 지속해 나갔다.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2007년 6월 3일 제주에서 한·일 외무장관과의 3자회담에서 한·중·일 3국은 아시아의 평화유지, 공동발전의 촉진과 역내의 화합이라는 면에서 공동의 이익, 공동의 책임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3국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표명하였다. 한·중·일 3국은 역내와 국제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3국 상호간의 정치적 믿음을 진전시키고 상호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하고 한반도비핵화 진전을 촉구하였다.⁸⁵

나. BDA문제 해결 이후

BDA문제가 예정보다 두 달간 지연되다가 BDA 은행에서 동결되어 있던 북한계좌의 현금이 극동지역에 있는 러시아 은행으로 이체됨에 따라 걸림돌이 되었던 BDA문제가 2007년 6월 15일부터 해결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BDA문제 해결을 적극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여러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⁸⁶

BDA문제가 해결되자, 북한은 크리스토퍼 힐 6자회담 미국대표의 방북을 수용하였으며 힐 대표는 평양방문에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해소됨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동시에 북한은 힐 차관보와의 회담이 포괄적이며 실무적이었다고 논평하면서 IAEA 사찰단의 방북을 허용한다고 표명하였다.

⁸⁵- *Xinhua*, June 3, 2007; 3국 외무장관은 교역, 경제, 에너지, 환경, 과학과 기타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하였다.

⁸⁶- 外交部 發言, “秦剛就匯業銀行涉及朝鮮資金問題取得積極進展答記者問,”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2007년 6월 15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30346.htm>>.

IAEA 사찰단은 그동안 영변 핵시설이 가동 중에 있었으나 핵동결 조치를 취하였으며 사찰과 관련해서 북한의 협조는 만족할 만하다고 평가하였다. 러시아 정보통은 북한이 2·13합의를 성실히 준수한다면 기술적으로는 영변 핵시설 동결이 7월 중순 경에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성급히 예상하기도 하였다.⁸⁷

북한이 IAEA의 사찰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2·13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2·13합의에 성실히 대응하자, 한국은 이 기회에 북한의 핵폐기 노력이 빨리 진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를 가졌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2007년 6월 29일 북경에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함께 BDA문제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해 북핵 폐기 조기이행에 속도를 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국은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을 7월 2일 북한에 보내 중·북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문제와 양국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7월 3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부 부장은 김정일 총서기와의 면담에서 북한의 조속한 영변 핵시설 폐쇄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원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6자회담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였다. 북핵 폐기 조기이행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도되었으나,⁸⁸ 북한은 4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북한은 내심으로 우선적으로 북·미 외무장관회담을 원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⁸⁷- *Interfax(Moscow)*, June 18, 2007.

⁸⁸- 『연합뉴스』, 2007년 6월 29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양 부장은 이번 북한 방문에서 북핵 문제와 양국 우호관계 발전 등 공동 관심사를 놓고 의견을 교환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도출하기 직전에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의 방북을 초청하여 북핵문제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7월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영변 핵시설이 완전히 폐쇄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이를 환영하고 2·13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에 이어 9월에는 북·미 관계정상화 및 북·일 관계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은 북·미와 북·일 관계정상화 논의에 대해 환영하고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⁸⁹

9월 4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북경을 방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에게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진행상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⁹⁰ 또한 김계관 부상은 핵 불능화 조치와 관련된 계획을 중국 측에 알려주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다음 6자회담에서는 더욱 구체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일본의 고무라 마시코 외상은 북핵 불능화가 시작된 2007년 11월 5일 ‘불능화에 따른 비용 분담은 일본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하여 종래의 일본인 납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북지원에 일절 나서지 않겠다던 입장을 바꿨다. 현재 북핵 불능화 작업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미국이 우선 106만 달러를 제공한 것뿐이다.

6자회담 2단계 합의에 따른 북핵 불능화 작업이 진전되고 있으나 문제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실하게 신고하느냐이며 이를

⁸⁹- 外交部 發言, “人劉建超就朝鮮關閉寧邊核設施答記者問,”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답화, 2007년 7월 17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41382.htm>>.

⁹⁰- 外交部 發言, “人秦剛舉行例行記者會,”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답화, 2007년 9월 6일 <<http://www.fmprc.gov.cn/chn/xwfw/fyrth/t359430.htm>>.

미 행정부가 어떻게 평가하느냐이다. 10월 6일 6자회담에서 중국과 미국은 북한이 핵물질 해외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환영을 표시하였다.⁹¹ 북한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북한의 성실한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실험 자료,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 일체가 필요하다고 하여 북한 측에 이들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집단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미국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⁹²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영변 핵시설과 핵계획이 폐기된다 하더라도 북·미 수교가 실현되지 않는 한, 북한은 과거의 핵무기까지 폐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⁹³ 이에 대해 미국은 우선 완전한 폐기 검증 완료보다는 핵물질 해외이전 불가를 북한이 성실히 실현한 것이 검증되면 핵불능화 조치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판단할 것이다. 중국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여 북한의 핵불능화 조치가 실현되고 있다고 평가하여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경수로 건설지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방할 것이다. 이로써 북·미 수교 논의와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한반도비핵화 실현은 사실상 중국과 한국이 기대하는 방향과 속도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⁹¹ “6-Party Talks Joint Document Says DPRK Reaffirms Not To Transfer Nuclear Materials: Joint Document of Six-Party Nuke Talks Released,” *Xinhua*, October 3, 2007.

⁹² *Radio Free Asia(RFA)*, November 12, 2007.

⁹³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연합뉴스』, 2007년 5월 31일.

2.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

2·13합의 초기이행에 따라 북한의 핵불능화 단계와 병행된 대북 에너지 및 경제지원에 대한 협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006년 9월에 합의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불능화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눠 대북 에너지 지원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안에 따르면, 1단계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가동 중단하여 사찰이 완료된 단계이며, 2단계는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계획 전모를 신고하여 검증이 끝난 상태를 의미한다. 북한의 핵불능화 단계와 병행한 대북 에너지 및 경제협력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3합의에서 북한은 불능화 1단계 조치로 중유 5만 톤 우선 지원 대가로 60일내 영변 5MW 원자로 등 핵관련 시설을 폐쇄(shut down)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불능화 2단계 조치로 핵프로그램 계획을 신고하고 검증이 끝난 경우, 5개 참여국이 중유 95만 톤을 균등히 분할지원하기로 되어 있다.

불능화 1단계 조치에 가장 먼저 응한 국가는 한국과 중국이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조속히 실현시켜 북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7월부터 10월까지 각각 중유 5만 톤씩을 북한에 지원하였다.⁹⁴ 미국과 러시아는 1단계 조치가 완료되면 지원에 나설 것임을 약속하였다.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북한이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

⁹⁴ Yonhap, “Officials From Two Koreas, China Hold Talks on Energy Aid Under Six-nation Deal,” November 10, 2007.

로 일본은 대북 에너지 및 경제지원 합의를 준수하지 않았다. 2007년 3월 미국은 북한의 병원, 학교 등에 2백 10만 달러 상당의 소형발전기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러시아는 수력발전소를 통한 직접 송전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유나 전력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북한은 경수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채, 모든 에너지를 중유 형태로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⁹⁵

2007년 9월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한 한·미·중·러 4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불능화 2단계 지원 품목인 중유 95만 톤 상당액 가운데 45만 톤은 중유로, 50만 톤 중유는 당시 시세로 환산하여 북한 발전소의 개·보수 설비 지원에 쓰도록 합의하였다.⁹⁶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1단계 불능화 조치 노력으로 대북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 10월 22일에 미의회에 연료용 석유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북 지원 예산 1억 600만 달러를 요청하였다.⁹⁷ 러시아는 대북 에너지 지원보다는 북한이 지고 있는 부채를 탕감하려는 입장을 지니고 있어⁹⁸ 일본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한국, 중국, 미국이 함께 균등히 부담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힐 미국무부 차관보는 10월 25일 향후 2주내 북핵 프로그램의 전면 신고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2007년 12월 31일 까지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가 완료되면 테러지원국 문제도 병행 해결될 것이며

⁹⁵- *Radio Free Asia(RFA)*, March 15, 2007.

⁹⁶- 『매일경제』, 2007년 10월 30일.

⁹⁷- "Bush Asks \$106 Million From Congress For Fuel Aid To N. Korea," *Itar-Tass*, October 22, 2007 (News Edge, Document Number: 200710221477).

⁹⁸- Bong-Geun Jun, "A Cooperative Approach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Vantage Point*, Vol. 30, No. 9, Yonhap News Agency, November 2007, p. 52.

아울러 한반도평화협정 체결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주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힐 차관보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결하더라도 약 3천만 달러로 추정되는 미국내 북한 동결 자산을 해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

북한은 10월 29일에 열린 경제·에너지 판문점 실무회의에서 신고 불능화 상응 조치로 기존의 요구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금년에는 매달 5만 톤 원유 지원받고⁹⁹ 종합적으로 50만 톤 원유(약 2억 달러 규모)와 나머지 45만 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북한의 발전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지원 품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을 제외한 4개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불능화 2단계 조치가 언제까지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일이 정해진 의무 규정이 없어 2007년 말 보다는 2008년 초에 불능화 2단계 조치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능화 실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북한의 과거 핵이나 플루토늄 추출, 고농축 우라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북·미 간 많은 협상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상기 문제에 미국이 납득할 수 없거나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핵불능화 2단계 실현에는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협상 역시 지연될 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사안과 기일이 핵불능화 2단계 조치에 합당하는가에 합의하는데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 대북 에너지 지원 사업으로 경유를 무상 지원하고 북한발전소의 개보수 사업 지원과 이미 합의된 수력발전소 공동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일본

⁹⁹- Kwang-ho Lee, "Six Party Talks and Working Group Activities," *Vantage Point*, Vol. 30, No. 9, Yonhap News Agency, September 2007, p. 21.

은 북한이 2007년 말까지 핵불능화 조치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으나¹⁰⁰ 대북 지원에는 망설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불능화 조치에 맞는 대북 지원과 북·미 수교 협상이 긴요하다는 입장에서 일본의 반대를 거부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도 일본이 대북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일본에게 대북 에너지 지원 참여를 적극 촉구하여 일본의 대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2·13합의에서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이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를 완료하는 시점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Korea Peace Regime, KPR) 구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2·13합의에서 KPR 논의 관련 당사국이 어느 국가를 지적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이 없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관련 당사국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였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한은 종전선언 혹은 평화조약 체결 당사국은 향후 3개국 혹은 4개국으로 될 것으로 합의되었다고 표명하여 그 후 중국이 사실상 배제되는 것이 아닌 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고 북한의 조속한 불능화 조치를 측면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한국은 남북한, 미국과 중국 4자 정상 종전선언 가능성을 미국에 타진하였다. 11월 초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한·미 워싱턴 외무장관회담에서 북핵 불능화 조치가 원만

¹⁰⁰- “Japan: Government Praises Six-Party Agreement; Press Criticizes ‘Ambiguity,’” *OSC Report*, October 9, 2007.

히 진전되면, 미국이 병행해서 북한에게 테러지원국 리스트를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KPR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한국과 합의하였다고 언급하였다.¹⁰¹

KPR 구축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왜 중국은 KPR 구축과정에 참여하려 하는가? 중국은 KPR 구축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가? KPR 구축을 위해서 중국은 객관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는가? 중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KPR 구축을 더욱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대북 영향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KPR 구축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중국의 참여 당위성과 관련, 일부 중국학자는 자국이 KPR 구축 과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중국이 정전협정에 조인한 국가이며, 둘째,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것이 중국외교의 핵심고리이기 때문이며, 셋째, 중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은 동북아 지역발전과 한반도 평화 증진의 원천이 될 것이기 때문이며, 넷째, 중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과정에서 정치, 외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 관련 당사국(남북한에 대한 중국의 균형외교와 중국의 대미 협상력 등) 모두를 조정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으로¹⁰² 지적하였다.

¹⁰¹- Yonhap, "N.K. Nuclear Disablement and Removal of U.S. Sanctions To Proceed in Parallel," November 11, 2007; 2007년 연말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면 미 행정부는 45일 전인 11월 16일까지 미 의회에 이를 통보해야 하지만 아직 행정부로부터 어떤 사전 협의도 받지 못했다고 미 의회 중진위원의 고위 보좌관이 11월 12일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이 의회 관계자는 전망하고 있다. *Radio Free Asia(RFA)*, November 12, 2007.

둘째, KPR 구축 필요성과 관련, 중국 정부의 주장에는 명분론적인 면이 많이 가미되어 있다. 중국은 그동안 정전체제는 냉전시대 산물이기 때문에 청산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혀 왔으나 구체적인 청산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실제로는 정전체제가 긴급히 폐기되어야 함을 강조하지 않았다. 2007년 4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한국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KPR 구축의 전제는 무엇보다 냉전체제 자체를 제거하는 것이다. 정전 이후 반세기 이상 동안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부재한 것은 오히려 비정상적”이라고 언급하여¹⁰² 냉전체제 제거가 KPR 구축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KPR 실현의 전제조건과 관련, 한반도비핵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미국 주장에 대해 중국학자는 한반도비핵화와 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행과 조화는 무엇이 다른가? 중국은 북핵이 완전히 제거되어야지 KPR 구축이 가능하다는 미국의 입장보다 더욱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미국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미국이 한반도비핵화가 전제라고 보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한반도비핵화와 병행하여 KPR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한반도비핵화 실현이라는 언급보다는 한반도에 있는 냉전체제 자체 폐기를 언급한 것은 한반도비핵화 실현 이후를 상정한 KPR 구축이 아니라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언

¹⁰²- Fu Mengzi, “Chin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The June 15 Summit and Building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의 발표논문, 2007. 6. 7), p. 123, pp. 128~130.

¹⁰³- *Xinhua*, April 6, 2007; Fu Mengzi, “Chin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p. 131.

급한 것이다. 나아가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중국은 KPR 구축 실현과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6자회담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관련당사국과 협의와 대화를 지속할 것임을 언급함으로써 6자회담 진전 속도에 맞게 추진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대두될 수 있는 논의 사안을 중심으로 중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

과거 중국은 북한이 정전협정 폐기를 주장한 데 대해 정전협정 유효성을 지지하여 왔다. 북한이 미국과 협상하여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하자 미국은 북한의 안을 거부하였다. 한국이 자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을 표방하자, 중국과 미국은 한국의 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면서도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이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곤 하였다. 일부 중국학자는 미국이 직접 관련된 주한·미군의 지위 및 주둔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북한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하고,¹⁰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에 만약 미국이 참여한다면 중국도 참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¹⁰⁴ Fu Mengzi, "Chin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p. 123. p. 133; 부시 미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2006년 4월 김정일을 만나면 자신의 의도를 잘 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06년 봄에 라이스 미국무장관과 젤리코 국무장관 외교정책 자문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전략 보고서를 부시 미대통령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았다. Seong-whun Cheon,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Vantage Point*, Yonhap News Agency, June 2007, p. 46.

현재 중국은 정전협정 유효성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다만 6자회담 내에서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임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이 관련 당사국으로서 참여하여 정전협정 폐기문제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의미이다. 2006년 부시 미대통령이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여 종전선언을 하면 어떠한 지 후진타오 주석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후 주석은 중국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다만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¹⁰⁵ 또한 후진타오 주석은 9월 시드니 APEC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하여 남북 관계가 발전하고 6자회담이 진전되면 한반도 평화조약(Peace treaty)에 대해 충분히 한·중 양국이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또 “6자회담이 진전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힘들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중국은 앞에도 포괄적이고, 균형감 있게, 그리고 꾸준히 6자회담을 전개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북핵문제가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보다 시급함을 암시하였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선언 당사국과 관련하여 북한은 2007년 10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참여 배제를 주장하여 한국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외교적 설득을 가하고 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정상은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제 4항에 따르면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¹⁰⁵ 2006년 중·미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의 발언.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로서, 이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느 국가를 지칭하는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은 점이다. 논란의 핵심은 한국 혹은 중국 중 어느 국가가 3자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2007년 남북 정상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3자라고 언급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남북한이 포함된다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즉 한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이 3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중국이 배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4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언급하여 종전선언과 KPR 구축 논의에 중국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다. 2007년 10월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 연설에서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서명 주체를 남북한과 미국, 중국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여 중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발언은 부시 미대통령의 3자 종전선언(중국을 배제)을 사실상 뒤집은 발언이었다. 그 후 부시 미대통령은 3자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입장은 4자회담을 통해 종전선언과 KPR 구축 논의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종전선언 참가국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10월 12일 김영남 북한 상임위원장은 한국 연합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이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공개적으로 중국을 배제하고 있음을 밝히지 못하였다.¹⁰⁶ 이로써 북한이 주장한 3자 종전선언 입장은 미국의 거부와 한

국의 입장변복으로 사실상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한국이 철저히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지 못하고 선불리 판단하여 쉽게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표출된 외교 실책으로 지적된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중국 배제 가능성이 암시되면서 중국은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10월 9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담화에서 “자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건립을 지지하며, 자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을 가진 국가이며,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체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이며....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은 ‘자연적으로 중요하고 건설적인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해 종전선언 및 평화체제 수립에 참여하여 긍정적인 역할을 능동적으로 행할 것임을 표명하였다.¹⁰⁷

중국이 강력히 참여를 주장하는 기본적인 논리적 근거는 정전협정이 종전선언의 전신(前身)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이다. 중국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즉 한국전쟁의 휴전을 위해 1953년 7월에 체결된 정전협정은 유엔 측 사령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간에 체결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정전협정을 개정하여 종전선언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협정에 참여하였던 중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동북아평화체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중국이 ‘자

¹⁰⁶- Yonhap, “N Korea Keeps Mum About Who Will Participate in Talks To End Korean War,” October 12, 2007.

¹⁰⁷- Yonhap, “China Must Not Be Excluded From Korean Peace Declaration Summit: Chinese Foreign Ministry,” October 9, 2007; “PRC FM Spokesman Says China Open To Playing Role in Korean War Peace Process,” *Radio Free Asia*(AFP), October 9, 2007.



연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멤버가 새로 바뀌는 등 국내 정치적으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이 지속되었다. 10월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후진타오 총서기의 『제17차 중국공산당 대표대회 보고』를 인용하여 중국은 앞으로 계속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번영하며,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 보고가 의미하는 것은 중국이 앞으로도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책임지는 건설적인 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동북아의 평화를 실현하는데 계속해서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하겠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실현(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유지)을 위해 중국은 책임지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다. 중국이 동북아 평화는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통해서만 동북아평화체제가 건립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의 대동북아 영향력이 약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자국이 미국보다 동북아 평화건립에 더욱 중요한 국가임을 시사하였다.¹⁰⁸

북핵 불능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연계하려는 한국의 ‘peace offensive’는 지속되었다. 11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 남북한과 미국, 중국의 4개국 정상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미리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이 제안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3가지 사안인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종전선언 문제 중 어느 사안이 우선한다고 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간을 소모할 뿐만 아

¹⁰⁸ 金强一, “中國的東北亞區域戰略与東北亞政治結構,” 『中國外交』, 2007年 9月, p. 58.

나라 격동적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⁰⁹ 미국은 노대통령의 언급을 수용하면서도 현재는 핵불능화 조치의 완전한 실현이 더욱 시급하다고 언급하여 사실상 노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였다.

중국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 역시 6자회담 진전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아 4국 정상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¹¹⁰ 4개국 정상선언이든 4국 외무장관 성명이든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되는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인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문제에 대한 협상 없이는 난항을 지속할 것이다.

나.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중국은 북한문제로 인해 미국이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무력 개입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여 왔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장기간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¹¹¹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기존의 영향력을 수용 인정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지위문제나 정전협정 철폐문제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은 것 역시 미국

¹⁰⁹ “S.Korean President Proposes Four-Nation Summit To Declare Peace on Korean Peninsula,” *Xinhua*, November 13, 2007; Yonhap, “Roh Proposes Immediate Summit of Four Nations To Declare Peace on Korean Peninsula,” November 13, 2007.

¹¹⁰ “S.Korean President Proposes Four-Nation Summit To Declare Peace on Korean Peninsula,” *Xinhua*, November 13, 2007. 노무현 대통령은 4개국 정상 선언은 1950~1953년 한국전쟁의 종식을 실현시키고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¹¹¹ Fei-Ling Wang, “China and the Two Koreas: Conducts, Concerns and Constraints,” p. 11.

의 영향력을 수용하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중국은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았다. 심지어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조차 중국은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주장하지도 않았다. 중국은 북핵문제와 주한·미군 지위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지위에 대해서도 북한의 입장과 차이가 있음을 표명하여 온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미 군사훈련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 규모가 축소되거나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표명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대남 선제 도발적인 무력도발에 대해 자국이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을 억제하여 왔다.

송민순 외무장관은 2007년 10월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전체제가 평화협정으로 대체된 이후에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유지 역할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¹¹² 중국은 구체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나 한국의 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미 수교이후 주한·미군은 더욱 감축되어야 하고, 평화체제 수립이후에는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¹¹²- Yonhap, "U.S. Troops To Remain in Korea After Korean Peace Treaty," October 26, 2007. 현재 약 3만 명의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다.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

중국은 남북한 군사적 신뢰구축은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관련 당사국들이 협상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은 남북 정치관계 진전 없이는 북·미 관계가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남북한에게 상호 정치관계 진전을 우선적으로 촉구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해 자국의 내정불간섭 원칙, 당사국간의 협상을 통한 방식에 근거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최근에 들어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로 인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중국은 북한에게 개발 자제를 표면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이를 억제하기 위해 대북 압력을 구사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국은 북한의 대남 선제 무력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개입 시 중국이 개입할 의무가 없음을 표명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욕을 억제시킬 뿐이다. 중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병행하여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방향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할 것이다.

4. 북·미, 북·일 수교

2007년 2·13합의 조치에 따라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실무그룹은 해당국들이 번갈아 가며 회의를 주최하도록 되어있다. 미국과 북한 북핵 전담대사가 북·미 수교 협상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다. 3월에 뉴욕에서 제1차 북·미 수교 협상을 시작하여 좋은 출발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지는 못하였으나 북한이 불능화 조

치를 하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회담은 진지하고 신뢰가 가는 대화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실로 50년 만에 처음으로 실현되는 양국 정상화 회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정치적으로 지지해서 더욱 진척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촉구하였다. 이태식 주미 한국대사는 과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방북하여 북·미 관계가 크게 진전된 것처럼 라이스 국무장관이 방북한다면 북·미 관계 개선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촉구하였으나 미국은 아직 때가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의 촉구를 사실상 거절하였다.¹¹³

실로 양국 수교는 국내여론을 감안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과 미래 지향적인 안보차원의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북·미, 북·일 양자 수교협상은 아주 어렵게 전개될 것이다. 북·미, 북·일 수교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중국은 과거에는 북핵문제 해결 여부와는 별도로 미국에게 대북 수교 협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이는 북·미(북·일 수교도 포함해서) 수교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있다.¹¹⁴ 중국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군사적, 정치적 불신이 매우 크게 때문에 미국의 정치적 의지, 즉 대북 관계 정상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주지시키지 못하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중국은 판단하고 있다.

¹¹³ “South Korea Urges U.S. Secretary of State To Visit DPRK,” *Xinhua*, October 11, 2007.

¹¹⁴ 洪停杓·張植榮 著, 『當代中國外交新論』, p. 240.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부터는 중국은 남북 관계 진전 속도와는 상관없이 북·미 관계 진전을 더욱 촉구하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으로서는 북핵 실험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더욱 시급해지고 있어 남북 관계 진전만으로는 풀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느 수준의 북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이 북·미 수교를 원하는 가이다. 말로는 급속한 북·미 관계 진전을 원하고 있지만 실상 조속한 북·미 수교는 한반도 현상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은 북·미 관계가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가장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상태가 아닌가?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그동안 중국에 배타적인 입장을 보여 온 북한이 미국의 입장을 중국의 입장보다 더 지지할 가능성을 우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북 관계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 역시 사전에 북·미 관계 진전을 견제하기 위한 면이 많다.

북·일 수교와 관련, 제1차 수교회담이 하노이에서 개최된 이후 2007년 9월 올란바토르에서 제2차 북·일 수교 협상이 있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북·미 수교협상 출발점이 좋은 반면에 북·일 수교 협상은 처음부터 난항을 예고하여 대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과 수교협상을 진행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교협상이 진전되지 않기도 하지만 일본이 KPR 구축회담 직접 관련국이 아니기 때문에 KPR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9·19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자국이 직접 관련 당사국이 아니어도 KPR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본은 자국과 북한과의 수교가 실현되어야만 KPR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이 자국과 수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¹¹⁵ 북·일 수교는 북·미 수교보다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북·일 수교에 대해 일본이 보다 더 전향적으로 임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5.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

2007년 북핵 2·13합의 조치에 따라 러시아가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 분야의 실무그룹 의장국으로 지정되었다. 3월 16일 북경 제1차 회의에 이어 8월 20일에는 6개국 참가국들이 모스크바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나 대체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되었으며 북핵문제보다는 북핵문제 해결이후 동북아 안보협력체 어떻게 실현을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었다. 회의 결과에 대해 러시아 대표인 블라디미르 라크마닌은 “사안의 본질상 조급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라고 언급하여 회담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하였다.¹¹⁶ 미국대표인 블레어 홀 국무부 동아태지역 안보협력 과장은 “이번 회의의 결론은 없었지만 매우 유용하면서도 실질적인 토론이었으며 분위기 또한 긍정적이었다”고 언급하였다. 홀 과장은 북한은 매우 답답하고도 솔직하게 회의에 참석했

¹¹⁵ 하지메 이즈미, “Japan’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일본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전략),” pp. 135:1~135:6.

¹¹⁶ Kwang-ho Lee, “Six Party Talks and Working Group Activities,” *Vantage Point*, Vol. 30, No. 9, Yonhap News Agency, September 2007, p. 23; *Itar-Tass*, August 20, 2007.

고 전혀 대립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여 북한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는 것보다 회의에서 나오는 문제를 경청하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대표들은 유엔헌장, 9·19공동성명, 2·13합의, 동북아 역내 안보협정 등을 검토한 후 시간을 가지고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 목표와 원칙에 관한 공동 분모를 추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참여국들이 기존의 안보협정이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를 구상하고 있어¹¹⁷ 구상 목표가 설정되는 데도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협력체 구축이 실현은 적어도 10년 이후에나 가능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과업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은 구축 시각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나 논의가 진전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피력하였다. 미국은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우선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아틀란틱 카운슬(the Atlantic Council of the U.S.) 보고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핵심이며,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에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에서의 전쟁 종식과 동시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¹¹⁸ 특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협정이 필수적이며 협정은 정치적이고 법적인 구조를 가져야하며 반드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틀란틱 카운슬

¹¹⁷ 『연합뉴스』, 2007년 8월 21일.

¹¹⁸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Korea,” *The Atlantic Council of United States Policy Paper* (April 2007), p. 11.

보고서가 초당적인 면이라는 점에서 향후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4자 협정이 실현된 후 이를 토대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보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한국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이후 6자 외무장관이 만났을 때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동북아 안보협력체에 대한 논의가 실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미국의 입장에 대해 그동안 중국은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매우 적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중국이 현재의 동북아 안보체제 역시 탈냉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양자간 동맹체제로(미·일동맹과 한·미동맹)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는 다자 안보협력체 구축이 단기간에 실현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있으며, 둘째, 중국 자신도 탈냉전 시대부터 현재까지 세력균형 전략(중·러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중·북 동맹조약 존속 등)을 통해 자국의 안보이익을 증대해 왔기 때문이며, 셋째, 공식 의장국인 러시아의 입장을 존중하여서이다. 다시 말하면, 중국으로서는 동북아 안보협력체에 대해 자신의 전략적 동반자인 러시아의 확실한 구상과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구체적으로 표방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자신의 입지를 축소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자국이 표방하는 소위 “조화로운 동북아 및 국제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의 세력이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전개하여 동북아 평화안보 구상에 대해 미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그동안 중국은 ASEAN+3에서 미국의 참여를 가능한 한 축소하여 자신의 역할 증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오고 있으며 특히 SCO 창설과 운영을 주도하면서 미국의 NATO 동진(東進)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주도의 아시아

I
II
III
IV
V

역내 다자협력체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포함한)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¹¹⁹ 이처럼 중·미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은 특히 러시아와 한국의 전면적인 공조 없이는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 구축에 능동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여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실현은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¹¹⁹ 배궁찬, “동아시아 협력과 미국 변수: EAS 개최 문제를 포함하여,” 『현지정책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p. 13.

V

결어: 전망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중국의 대북 정책은 단순한 양국관계만을 지향하는 정책이 아니었다. 중국은 공화국 성립이후부터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대북 관계를 설정하여 온 것이다. 그런 다음 동아시아 부속 세력판도를 고려하여 대북 정책의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6자회담 2·13합의와 그 후에 전개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도 중국의 기본적인 안보전략인 한반도 안정과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억제에 지속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북 정책 방향(북한의 안정유지와 대북 경협 확대)이 지속되었다. 중국의 대북 정책(4개 분야로 구분하여)과 2·13합의에 따른 여러 사안들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망하고자 한다.

1. 중국의 대북 정책

가. 정치 분야: 가장 제한적 성장

중국은 대북 정책 전개에 있어 군사협력 관계 발전보다는 정치와 경제 관계 확대를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로 나아가기를 기대할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실행한 후부터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관계를 지속발전 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포괄적인 대북 협력이라는 촉매제를 활용하였으나 양국이 정치적 동반자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그 예로 북한의 핵실험을 들 수 있다.

중·북 양국의 정치 관계가 한계를 보이는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 과거가 주는 교훈이다. 즉 과거에 중·북 양국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을 양국은 잘 기억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북한의 요구인 핵기술 이전을 거부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원치

않았으며, 북한의 안전보장 요구에 대해서도 미국에게 강력히 주문하지 않아 북한으로부터 신뢰(credibility)를 얻는데 부족하였다. 아울러 북한 역시 중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였다. 중국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에 찬성하였기 때문이다. 전략적인 공동보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양국간에 구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중·북 양국이 정치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이 중국의 부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 중국이 사회주의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개방하려고 신의주 행정특구 개발을 천명하였을 때 중국이 이를 차단해 버린 사실을 북한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정치, 경제적으로 부상하면 할수록 자국을 사회주의 동맹국이며 전통적인 우호국가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골칫거리(trouble-maker)로 간주하여 압력을 크게 행사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중국이 탈북자 처리 과정에서도 자국이 요구하는 바를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고 소위 ‘인도적 차원’이라는 입장에서 한국으로 인도하는 데 대해 불만을 지녀 왔다. 즉 북한의 시각으로는 중국은 자신의 정치적 동반자가 아닌 것이다. 향후 미국 특히 미의회가 탈북자를 북한에 중국이 송환하는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비난하고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의결하여 중국에 압력을 행사해 나갈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사안에 따라 미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북 양국은 긴장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북한은 공개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으나 중국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한, 중국의 야욕에 대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은 증대될 것이며 이로 인해 양국 정치관계 발전을 제한할 것이다.

셋째, 향후 중·북 양국 정치관계의 가장 큰 변수로 등장하는 북·미 수교로 인해 중·북 정치관계 발전은 또 한 차례의 한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북·미 수교를 통해 미국과의 정치관계를 개선하는데 주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중국과의 정치 관계 발전을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사전에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전면적인 정치관계 발전을 제 안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나 북한의 수동적인 그리고 편향된 외교 전략으로 인해 한계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중국의 촉구인 양국 정치 지도자, 국회, 정부 고위관료 들의 상호 교류와 정기적 방문을 활성화해 나갈 것이나 제도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할 것이다. 즉, 북한은 중국의 이익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수교협상을 통해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고 대중 정치적 의존 성향을 축소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나. 외교 분야: 협의 상대자로 지속

북한은 자국이 국제적 고립감을 심히 느꼈을 때만 중국과 한국에 외교적으로 접근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과 한국과의 민족공조를 더욱 강조한 경험이 있다. 한편 한국과 중국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감이 심화되는 것은 국제정세에 대해 올바른 식견을 가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의 국제적 참여 유도과 대북 협상외교를 적극 시도해왔다.

중국은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북 협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북 외교협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중국은 북핵 실험이 자국의 대북 외교 실패라고 내부적으로 진단하였을 것이다. 중국은 대북 외교의 실패가 어디에서 기인하였는가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적인 협의를 진지하게 진행하지 못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중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 2·13합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청취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협의와 중재 역할을 지속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장미 빛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이 자신은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건설적인 역할을 긍정적으로 행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은 향후 중국이 북한의 입장에 경도된 정책을 전개하지 않을 것을 암시한 것으로 중·북 양국사이에 의견 차이가 노출될 것이다.

중국은 북핵 불능화 조치 수준과 대북 평화적인 핵이용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정책을 표출할 것이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 나타나는 사안인 주한·미군 지위 변경 문제에 대해 북한과는 다른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양국간 외교 갈등이 나타날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정상화 협상이 잘 진전되면 될수록 미국과의 원만한 수교를 기대하여 주한·미군이 향후 동북아 안정을 유지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한국에 주둔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대북 위협요소 철폐만을 요구할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의 입장과는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반드시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거나 다만 상징적인 존재로만 한국에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북 양국 외교 갈등이 예상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난관이 예상된다.



다. 군사안보 분야: 협의상대로 지속

중국 특히 중국 군부는 미국을 제1의 잠재 적국으로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대결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집단이며 자신을 중국 사회주의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군부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자국을 홀시하고 있지만 군사전략상 대미 견제용으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으며¹²⁰ 북한을 포기할 경우 중국이 사회주의를 배반한 국가로 낙인찍히는 것을 우려 북한을 안보 협의 상대국으로 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중국 정부의 대미 중시 외교로 인해 북한과의 안보 협의는 적었다. 북한이 중국을 신뢰하지 못해 안보협의를 적극 추진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중국이 미국을 의식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원치 않은 적이 많았다.

중국이 대북 군사 협의를 재개하거나 시도하는 경우는 사안의 중요도가 심할 경우였다. 중단되었던 중국의 대북 군사외교가 2003년 8월 북한이 제1차 6자회담에 참여함과 동시에 재개된 적이 있었다. 중국 군부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군부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북한에 파견된 목적은 북핵문제 해결 협상을 위한 목적이었다.

북핵실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 군사협의를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군부는 북한이 핵실험 감행에 대해 사전에 자국과 협의하지 않은 점은 자신이 대북 군사 교류를 충분히 행하지 못한 데도 그 이유가 있다고 파악하였다.

¹²⁰- He Xingqia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Sino-American Relations: A Chinese Perspective," 『국방정책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p. 80.

향후 북핵 불능화 조치가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미 정상화 협상도 진전될 것이다. 중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북 군사 협의를 위한 교류와 정기 방문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을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삼지 않고 단지 협의 대상으로만 간주함으로써 중·북 군사협력은 가장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경제 분야: 중국의 대북 경협 확대와 북한의 대중 의존도 증대

중·북 경협과 관련, 양국간 교역 규모와 분야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 투자는 향후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에 치중될 것이며 투자 규모 역시 점진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중국의 대북 투자 증대를 환영하면서도 자국의 천연 자원 발굴에만 치중하는 투자 확대에도 별 다른 견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북 교역과 투자 면에서 보면, 양국이 약속한 ‘상호 호혜협력의 원칙’이 사실상 이미 존재하지 않고 있어 중국의 이익이 많이 가미된 상태의 편향된 중·북 경협 양상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양국의 경제협력 순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경협 상에 갈등이 예상된다. 그 이유로는 첫째, 북한은 농업을 경제개발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데 반해, 중국은 북한의 에너지 확보를 우선순위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국간 경제협력이 주로 중국 주도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로써 북한경제가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것을 북한이 우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중국의 대북 경협의 증대되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

는 더욱 심화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불균형 발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2·13합의에 대한 중국의 입장

가.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경제지원 문제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6자회담틀 내에서 북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핵불능화 중간 단계가 되면 대북 2단계 경제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여 북한의 발전기 개보수용 시설을 지원하고 남북 관계 진전 속도와는 상관없이 북·미 관계 진전을 더욱 촉구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경수로 지원요청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여 미국의 주장인 북한이 NPT 가입 이전에는 경수로 제공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경수로 논의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은 일본이 북·일 관계 진전과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을 연계하기 보다는 북한의 불능화 조치에 따른 대북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동참할 것을 더욱 권유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개발 계획 폐기야말로 북·미 수교 협상과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북·미 수교협상이 병행해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입장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 외교 및 경제 제재 결정 폐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미 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북한 핵이 검증가능하게 폐기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미국과 함께 북한의 핵물질 해외 이전 반대를 강력히 주장할 것이다. 4개국 정

I

II

III

IV

V

상 종전선언에 대해서 중국은 핵불능화 2단계 조치가 해결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중국은 우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만약 미국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참여하면 자국도 참여할 것이다. 중국은 자국이 참여하지 않고 남북한과 미국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경우 향후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정당성을 관련국이 묵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하여 참여하여야 함을 강조할 것이다. 한국은 평화협정 체결이후 중국을 의식하여 주한·미군을 감축하고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쟁점으로 우선 주한·미군의 지위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중국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협정 체결 조건으로 북한이 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을 제시하지 않는데 대해, 중국은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북 견제용보다는 대중 견제용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주한·미군의 완전한 철수나 상징적인 존재로만 한국에 남기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 문항에 남북한의 단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표명하고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남북한이 적어도 중립적이기를 요구할 것이다. 주한·미군 지위 변경 여부와 관련 없이 중국은 한·미 안보동맹 조약이 존재하는 한, 중·북 우호조약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거나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지 않을



것이다. 평화협정 문안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문구가 들어갈 경우 중국은 자주적이며 평화적이며,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주장할 것이다.¹²¹

다. 북·미, 북·일 수교 문제

중국은 북·미 수교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입장에서 북·미 수교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북·미 수교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중국은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나 북·미 수교 협상에서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이 실현되기를 기대할 것이다. 중국은 만약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북·미 수교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이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북·미 수교 이후 일본에게 북·일 수교 실현을 더욱 촉구할 것이다.

라.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 구축 문제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시화될 때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표명할 것이다. 중국은 동북아에 조화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해나간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의 구체적인 입장을 본 다음에 자신의 구체적인 입장을 피력해도 무관하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해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을 것이며 역내의

¹²¹ 일부 중국의 학자들은 내심으로 남북한 합의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한국의 북한 흡수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군비경쟁, 미·일동맹의 강화 등이 평화안보협력체 구축에 장애라는 견해를 제시할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개입이 축소되어야만 동북아 평화안보 협력체 구축이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에 미국의 관여 정도가 축소되어야 하는가 혹은 강화되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역내 국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일치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고 자신이 그동안 구축한 경험이 있었던 SCO 구축 예를 많이 도입하여 영토보전, 내정불간섭, 국제사회의 동등한 참여, 점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한반도 중립, 동맹관계 철폐, 역내 경쟁 확대 등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최춘흠.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6.
한국국방연구원. 『2006-2007 동북아 군사력』.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Goodman, David S.G. “Can China Change.”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Regional Challenges*. edited by Larry Diamond, Marc F. Plattner, (et. al.).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7.

Hao, Yufan.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A Chinese View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Jisi, Wang. “China’s Changing Role in Asia.” *Rational Reflection on International Politics*. Beijing: Peking University Press, 2006.

Kim, Byung-Kook and Jones, Anthony (eds.). *Power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Shifting Strategies*.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7.

洪停杓·張植榮 著. 『當代中國外交新論』. 香港: 勵志出版社, 2004. 3.
岳喜田·張長力 主編. 『朝鮮半島問題研究論叢 二』. 延邊大學 東北亞國際政治研究所, 2006.

葉自成 著. 『中國大戰略』.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3. 11.

2. 논문

- 김재철. “후진타오의 방미와 미·중 관계.” 『정세와 정책』. 5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6.
- 박홍서. “탈냉전기 중·미간 ‘협조체제’의 출현: 9·19공동성명 후 북핵 문제에 대한 중·미간 협력.” 『국제정치논총』. 제47집 3호, 2007.
- 배궁찬. “동아시아 협력과 미국 변수: EAS 개최 문제를 포함하여.” 『현지정책연구』.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6.
- 이규열. “최근 동북아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통권 제77호 가을호.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 이태환. “미·중 고위급 회담과 후진타오 방미의 의의.” 『정세와 정책』. 9월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5.
- . “21세기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선택.” *NSP Report*. 『외교안보센터 국가안보패널 정책보고서 8』.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5. 5. 25.
- 조명철·정승호. “북핵과 북·중 경제관계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제7권 22호.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4. 27.
- 하지메 이즈미. “Japan’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일본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전략).”
- 황재호·배재홍. “한·중 군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언.” 『주간국방논단』. 제1154호(07-23).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7. 6. 4.
- “A Framework for Peace and Security in Korea and Northeast Korea.” *The Atlantic Council of United States Policy Paper*. April 2007.

- Baokang, Xu. "Work Together for A Beautiful Future on the Korean Peninsula." *Renmin Ribao*. Internet Version October 5, 2007.
- Bhattacharya, Abanti.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udies. "Chinese Nationalism and China's Assertive foreign Policy." *The Journal of East Asian Affairs*. Vol. 21, No. 1, Spring/Summer, 2007.
- Chuan, Lin. "DPRK, ROK Want To End Military Hostility, Move Toward Reunification: Many Variables Remain." *Zhongguo Tongxun She*. October 6, 2007.
- Chang, Ching-wei. "U.S. Should Rid Itself of Arrogant Thinking toward China." *Ta Kung Pao(TKP)*. Internet Version October 23, 2007.
- Cheon, Seong-whun. "An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Regarding the North Korean Issue." *Vantage Point*. Yonhap News Agency, June 2007.
- Hong, Jeong-Pyo. "The Dragon Rises: Is China Going to Be a New Hegemon in East Asia?"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Vol. 8, No. 2. Seoul: The Society of World Peace and Unification, 2007.
- "Japan: Government Praises Six-Party Agreement; Press Criticizes 'Ambiguity'." *OSC Report*. October 9, 2007.
- Jun, Bong-Geun. "A Cooperative Approach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Vantage Point*. Vol. 30, No. 9. *Yonhap News Agency*, November 2007.

- Kahn, Joseph. "Beijing Weighs Reducing Oil Shipment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20, 2006.
- Lee, Kwang-ho. "Six Party Talks and Working Group Activities." *Vantage Point*. Vol. 30, No. 9. *Yonhap News Agency*, September 2007.
- Liu, Dunqiu. "DPRK's Reform and Sino-DPRK Economic Cooperation." *Nautilus*. 2006.
- Mengzi, Fu. "China's Strategy for the Implementation of a Framewor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중국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이행)."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The June 15 Summit and Building of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통일연구원 주최 국제세미나의 발표 논문, 2007. 6. 7.
- Park, Hun-Jun. "Paradigms and Fallacies: Rethinking Northeast Asian Security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6, No. 1. Seoul: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2007.
- Wang, Fei-Ling. "China and the Two Koreas: Conducts, Concerns and Constraints."
- Xingqiang, 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n Sino-American Relations: A Chinese Perspective," 『국방정책연구』.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 金强一. "中國的東北亞區域戰略与東北亞政治結構" 『中國外交』. 2007年 9月.
- 平可夫. "中國軍備豫算的虛與實." 『亞洲週刊』. 2005年 3月 20日.



3. 기타자료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서울신문』.

『연합뉴스』.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홍콩신보』.

Interfax(Moscow).

Itar-Tass.

Radio Free Asia(RFA).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Korea Times.

Taipei Times.

Xinhua.

『人民日報』.

『解放軍報』.

『星條紙』.

주 북한 중국대사관 사이트.

중국외교부 사이트 대변인담화.

연구총서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운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2006-01	Cooperativ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전성훈	저	10,000원
2006-02	한반도 경제통합 모형의 이론적 모색	임강택	저	7,000원
2006-03	7·1조치 이후 북한의 농업개혁과 과제	최수영	저	5,000원
2006-04	북한경제의 대외의존성과 한국경제의 영향력	이 석	저	8,000원
2006-05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의 연계: 4대 분야 협력체 형성 중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6	북한체제의 내구력 평가	전현준	외 공저	10,000원

2006-07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개혁의 부작용을 통해 본 북한 체제전환의 성공과제-	김영운	저	10,000원
2006-08	남북한 공유하천 교류협력 방안	손기웅	저	6,000원
2006-09	북한의 당·군·민 관계와 체제 안정성 평가	정영태	저	7,500원
2006-10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황병덕	저	8,500원
2006-11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서재진	저	10,000원
2006-12	평화통일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조 민	저	6,500원
2006-13	중국의 대북한 정책: 지속과 변화	최춘흠	저	5,000원
2006-14	한·미 안보관계의 변화와 북·미관계의 전망	박영호	저	7,000원
2006-15	동북아지역의 갈등·협력과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대외전략 배치	최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6-16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임순희	저	8,000원
2006-17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의제: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저	10,000원
2006-18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	조정아	저	6,000원
2006-19	남남갈등해소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01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최진욱	저	6,500원
2007-02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김수암	저	6,000원
2007-03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서재진	저	8,500원
2007-04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전성훈	저	10,000원
2007-05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손기웅	저	7,000원
2007-06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07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최수영	저	6,000원
2007-08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09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정영태	저	6,000원
2007-10	평화번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7-11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정영태 외	공저	7,000원
2007-12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김국신 외	공저	8,500원
2007-13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배정호	저	6,000원
2007-14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최춘흠	저	5,000원
2007-15(I)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김규륜 외	공저	10,000원
2007-15(II)-1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2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3	東北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5(II)-4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김규륜	편저	10,000원
2007-16	남북 문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외	공저	8,000원
2007-17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이 석	저	8,500원
2007-18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조한범	저	5,000원
2007-19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이금순	저	7,000원



학술회의총서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2006-01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전략	10,000원
2006-02	한반도 평화포럼: 구상과 이행	9,500원
2006-03	동북아구상과 남북관계 발전전략	10,000원
2006-04	Political Economy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alism :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ecurity Cooperation	9,500원
2006-05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The Future of Northeast Asia	7,000원
2007-01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8,500원
2007-02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10,000원
2007-03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9,000원

협동연구총서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II)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2006-04-01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 총괄편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2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 안보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04-032020 선진 한국의 국가전략(II): 경제전략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6-11-01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2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분야별 현황과 과제			10,000원
2006-11-03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상)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4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중)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1-05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1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총괄편)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6-12-02동북아 지역내 NGO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7-10-01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6,000원
2007-10-02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손기웅 외	공저	9,000원
2007-10-03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최대석 외	공저	7,500원
2007-11-01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7-11-02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임성학 외	공저	9,000원
2007-11-03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500원
2007-11-04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함택영 외	공저	6,000원
2007-11-05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전성훈 외	공저	6,500원
2007-11-06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김규륜 외	공저	8,000원
2007-11-07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7-11-08한반도 평화·변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양현모 외	공저	7,500원
2007-11-09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박광기 외	공저	8,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2호 (2005)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2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1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5, No. 2 (2006)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1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6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6</i>	임순희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7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김수암 외 공저	10,000원

독일통일백서

독일통일백서 2005	8,500원
-------------	--------

연례정세보고서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2006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6~2007	6,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운,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운,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양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망: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운,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해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2006-01	2006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서재진, 임강택, 전현준, 정영태, 최진욱
2006-02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결과와 향후 한반도 정세 전망	전현준, 김영운
2006-03	2005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6-04	북·중관계 강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	박종철, 김국신, 최수영, 허문영, 전병곤
2006-05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6-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 결과분석	서재진, 김영운
2006-07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	김국신, 배정호
2006-08	북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 4년의 평가와 전망	김영운
2006-09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0	아베 정권의 출범과 대한민국 정책 전망	배정호
2006-11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대응	김국신, 박영호, 배정호, 여인곤, 최춘흠
2006-12	미국 중간선거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6-13	APEC 정상회의 결과분석	김규륜
2007-01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허문영,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2007-02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2007-03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김수암, 이금순
2007-04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2007-05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전성훈
2007-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최수영
2007-07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최수영
2007-08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2007-09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김국신, 여인곤
2007-10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배정호

2007-11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정영태
2007-12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7-13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여인곤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객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철
2005-06	제4차 6자회담 합의 이행구도	전현준, 박영호, 최진욱, 이교덕, 조한범, 박종철
2006-01	남북한 관광사업 활성화 방안	김영운
2006-02	2006년 QDR의 특징 분석과 한반도안보에 주는 시사점	박영호
2006-03	북한 개발협력에 위한 주요 쟁점과 정책 과제	임을출
2006-04	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추세와 한국의 정책방향	김규륜
2006-05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과 우리의 정책방향	전현준
2006-06	국내외 북한인권 동향 평가와 인권개선 로드맵	서보혁
2006-07	북한군 최고사령관 위상 연구	고재홍
2006-08	평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와 통일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이현근
2006-09	김정일 정권의 정세인식: '선군'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전미영
2007-01	북핵 '2·13합의' 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전성훈
2007-02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조한범
2007-03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2007-04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박형중
2007-05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여인곤,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2007-06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임을출
2007-07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최진욱
2007-08	북핵 폐기를 위한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전성훈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1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1권 2호(2006)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2007)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총서

비매품

제1호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2006-01 The North Korean Penal Code, Criminal Procedures, and their Actual Applications Kim Soo-Am
- 2006-02 North Korea's Negotiation Behavior toward South Korea
: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st Inter-Korean Summit Era
Huh, Moon-Young
- 2006-03 The Establishmen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utlook for Unification Cho, Min
- 2006-04 A Study on the structure of industry in North Korea Choi, soo-young
- 2006-05 The Border-crossing North Koreans: Current Situations and Future Prospects Keumsoon Lee
- 2006-06 North Korea's Human Resource Development System Cho, Jeong-Ah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 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우편번호: 142-728)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회 원 가 입 신 청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 무 처				
	직 위			
간 행 물 받을 주소	(우편번호 :)			
연 락 처	전 화		FAX	
	전자메일			
	ID		PW	
전 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우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140-002-389681 (예금주: 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